「지방정부연구」 제26권 제3호(2022. 11): 155-195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26 No.3 (November 2022)
http://dx.doi.org/10.20484/klog.26.3.7

생존분석을 이용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생존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최 희 성**
민 병 익***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생존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생존율과 생존기간을 살펴보고,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국 510개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자료(2016년~2020년)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생존의 영향요인으로 조직특성요인, 재정요인, 정부정책요인, 사회적가치요인, 네트워크요인 등 5가지 요인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생명표분석에서 5년간의 사회적협동조합의 생존율은 58%였으며, 1년차 폐업발생위험이 5.3%, 2년차 10.2%, 3년차 10.2%, 4년차 16.3%로서 연차가 증가할수록 폐업발생위험이 증가하였다. 둘째, 정부지원유형별 생존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정부지원이 없거나 중단된 조합은 모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률이 증가하였고, 정부지원이 중단된 조합의 경우 4년차 폐업발생위험률이 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조직유형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위탁사업형의 생존기간이 4.7년으로 다소 짧았으며 4년차 폐업발생률이 37%로 가장 높았고, 모든 조직에서 연도별 폐업발생위험이 전반적 증가추세를 보였다. 넷째, 콕스회귀분석결과 정부지원금, 총회 및 이사회 개최빈도, 지역사회기여도 등이 주요 영향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정부지원이 중단된 조합은 지속된 조합보다 폐업발생위험이 10배 이상 높았으며, 총회개최는 한 단위 증가할수록 폐업발생위험률은 42%만큼 감소하였고, 이사회개최 횟수는 폐업발생위험률이 2.2%만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생존은 조직과 재정요인보다 정부정책요인, 사회적가치요인, 네트워크요인이 생존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생존율 제고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협동조합, 생존분석, 생명표분석, 콕스회귀분석

Ⅰ. 서론

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협동조합의 중요성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21S1A5B5A17046832)

** 제1저자
*** 교신저자

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21년 12월 기준(전국)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상 일반협동조합의 생존율이 73%, 사회적협동조합의 생존율은 98%로서 일반신생기업의 1년차 생존율 64.8%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기획재정부, 2021.12). 또한, 일반기업의 경우 5년 생존율은 31%인 반면, 사회적기업의 경우는 5년 생존율이 79.7%로 나타나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존율이 일반기업보다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성장모델로 제시되고 있다(2021, 고용노동부). 사회적경제가 일찍이 발달한 스페인의 경우 초고령사회 인구구조, 공공 의료시스템 및 관련 인프라 부족, 관계 중시의 사회문화적 특성 등으로 사회 취약계층들이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지만,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협동조합의 경우 불안정한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일자리의 모델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한겨레신문, 2020.04.20.).

한국 사회적경제의 도입은 정부 차원에서 1차산업의 육성을 위해 개별법협동조합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실시한 이후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사회적경제 제도가 되입되는 과정이었다(김기태 외, 2018:18). 2000년에 들어와 각 부처별로 '사회적경제 지원책'을 마련하여 각 부처별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왔다. 특히 201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앙부처에서 22개의 사회적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하며, 보다 본격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중심의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김진영·정석호, 2020:1).

협동조합의 경우 일자리, 복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보완적 사업모델로 부각됨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2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된 바 있다. 기본법의 제정 이후 수년 동안 신고·인가된 협동조합은 급속히 증가하였으며[1] 기획재정부가 2020년에 실시한 제5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말 신고·인가된 협동조합은 19,429개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협동조합의 급속한 성장에 비하여 2016년 말 기준으로 1만여 개의 협동조합 중에서 실제 운영 중인 협동조합은 6,168개로 58.1%의 협동조합만이 운영되고 있으며, 4,447개의 협동조합은 폐업(1,453개)을 하거나 사업이 중단(2,994개)된 상태에 있다. 그 이유로는 수익모델이 미흡하거나 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부족, 조합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이 제시되고 있다(장승권 외, 2018:2). '협동조합 기본법'의 시행 이후 다양한 업종에서 많은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고 정부의 지원도 강화되고 있지만, 오랜 기간 자립구조를 통해 성장해 온 해외사례에 비추어 보면 아직 국내 협동조합의 성장과 생존을 위한 토대가 구축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정도영 외, 2014:2). 또한, '협동조합 기본법'을 통해 일정 기간 협동조합이 자립할 수 있는 자생력을 확보하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매우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협동조합의 연구와 관련하여 학계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1980년대에는 주로 협동조합

1) 협동조합의 설립 수는 2016년 10,615개에서 2018년 14,526개, 2020년에는 19,429개로 2018년 대비 33.8%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는 22,132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5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2022).

의 개념 및 가치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2002년 이후에는 협동조합의 운영 및 경영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구는 2008년 이후 새롭게 등장했으며, 2000년 이전에는 생산자 협동조합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었고, 사회적협동조합과 노동자 협동조합에 대한 연구로 다양해진 시점은 2010년 이후로 볼 수 있다(염찬희, 2015:91-108). 그리고 최근까지 새로운 사회적 경제주체로 성장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협동조합의 역사와 발전, 조합의 특성, 법·제도적 관점에서 협동조합의 방향을 논의한 이론적 연구(정순문, 2019; 장종익, 2017; 임욱빈 외, 2016; 두성림 외, 2020; 전형수, 2013)가 있다. 둘째, 협동조합의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계량적방법을 활용한 실증적 연구(최유진, 2017; 박성훈·김창범, 2017; 장승권 외, 2018; 유두호·엄영호, 2020; 김세운 외, 2019; 김복태 외, 2016; 서지영 외, 2014; 유두호·황정윤, 2018)이다. 셋째, 국내·외 사회적협동조합의 개별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한 사례연구(두성림 외, 2020; 정도영 외, 2014)등이다. 비교적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만 사회적협동조합에 연구는 그동안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연구와 지원에 비해서 아직까지 활성화되었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조직의 생존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의 생존에 대한 연구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 지원하여 연구를 수행(길현종 외, 2014; 이영수 외, 2017)하였고, 지역의 경우 충남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의 생존분석(김우영, 2017)이 수행된 바 있다. 그러나 사회적협동조합의 생존율 추이와 생존의 영향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기법을 이용하여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 생겨난 사회적협동조합의 생존 실태와 위험률을 구하고자 한다. 즉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된 후 얼마이후의 기간만에 휴·폐업을 하는지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휴폐업의 위험률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이후 휴·폐업하기까지의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생존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생존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기존 연구들이 수행하지 않은 분야를 연구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차별성이 있다. 첫째, 그동안의 연구들이 정부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진 반면, 본 연구는 정부지원이 비교적 제한적이고 설립인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생존율 추이를 분석하였다. 둘째, 일반기업과 조직의 특성이 다른 협동조합의 생존 영향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연대·협력기업의 활성화와 생존율 향상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셋째, 사회적협동조합의 생존 영향요인 중에서 조직과 재정요인 외에 정부 정책적 요인과 사회적 가치요인, 그리고 네트워크 요인 등 사회적협동조합의 생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1. 사회적경제조직의 의의와 유형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는 복지국가의 축소위기와 시장경제의 대안적 경제로서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도입된 개념이며, 한국의 경우는 IMF 금융위기와 장기적인 경기침체, 실업률상승과 사회적 양극화가 진전된 2000년대 초반에 정부 주도로 사회적 경제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김복태 외, 2018:184). 사회적 경제의 개념은 국가나 시대별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2] 먼저 OECD에서는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에 내재 된 것으로 사회적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EU는 참여적 경영시스템을 갖춘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사단, 재단 등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캐나다 퀘백에서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6대 원칙[3]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의 경제활동으로 정의한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2022). 한국에서는 구성원 간 협력, 자조를 바탕으로 재화, 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나 시대별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구성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국가와 시장의 경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의미하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다(사회적경제활성화 방안, 2017).

국내 사회적경제조직은 크게 〈표 1〉과 같이 크게 4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표 1〉 국내 사회적 경제조직의 유형

구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근거법률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지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07년	2012년	2010년	2012년
주관부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목표	사회서비스 공급을 통한 고용창출	조합원권익향상 (고용불안해소, 임금향상), 지역사회공헌	지역발전, 마을공동체활성화,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저소득실업자 (수급자 및 차상위자) 일자리 창출
대상	취약계층	일반시민, 취약계층	일반시민	취약계층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socialenterprise.or.kr, 2022) 참조하여 재구성

먼저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영리

2) 유럽 사회는 제3섹터(The third sector)를 사회적 경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미국 사회에서는 비영리조직(NPO)의 영역을 사회적 경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신창환, 2015:95).

3) 6대 원칙은 ① 구성원 및 공동체의 필요 충족 ② 국가로부터의 자율성 ③ 민주적 지배구조 ④ 경제적 성과 추구 ⑤ 출자액에 비례한 배당 금지 ⑥ 해산 시 잔여재산 타법인 양도 등이다.

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각종 시설비, 교육훈련, 경영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라 협동으로 영리활동을 하며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조직이다.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하면 사업의 종류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정도영 외, 2014).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지역주민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또한, 마을기업은 지리적으로 타 지역과 구분이 되어야 하며 출자자의 70% 이상이 마을주민이어야 한다.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라 저소득실업자(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설립하고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수급권자 등의 자활을 지원하는 것이 운영목적이다.

〈표 2〉 국내 사회적 경제조직의 현황

구분	기업수(개)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사회적기업	1,877	2,122	2,435	2,777	3,215
협동조합	12,039	14,158	16,589	19,429	22,132
마을기업	1,442	1,514	1,556	1,652	1,697
자활기업	1,092	1,211	1,176	1,062	997
합계	16,450 (14.1%↑)	19,005 (15.5%↑)	21,756 (14.5%↑)	24,920 (14.5%↑)	28,041 (12.5%↑)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socialenterprise.or.kr, 2022)

최근 국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수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협동조합의 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설립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협동조합이 18,607개(83.5%), 사회적협동조합은 3,549개(15.9%), 연합회는 115개(0.6%)로서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 2만 개를 넘어서고 있다[4](협동조합 홈페이지, 2022).

협동조합은 다양한 가치와 삶의 동기를 가진 개인들이 모여 서로 경쟁적으로 살아가는 현대도시에서 공동체성을 확장시키는데 유의미한 방식이다(정규호, 2013:13). 또한, 협동조합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관계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Majee & Hoyt, 2011:52), 지역에 개별적으로 분산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인적·물적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결집하여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Zeuli & Radel, 2005:43; 정규호, 2013:13).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되며, 일반협동조합은 다시

4) 일반협동조합의 설립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4,001개, 경기 3,299개, 전북 1,295개, 전남 1,098개, 강원이 1,083개 순으로 높으며,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현황을 부처별로 보면 보건복지부 소관이 1,367개, 교육부가 535개, 고용노동부가 321개 순으로 속해있다(협동조합 홈페이지, 2022).

설립목적, 조합원구성 등에 따라 소비자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고용 등 사회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조직으로 사회혁신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두성림 외, 2020:37). 또한, 과거 전통적인 비영리기관이 상업적이지 못한 성격으로 지속적 성장이 어려웠으나, 사회적협동조합은 더 안정성이 있으며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하는데 개방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조합원으로 참여시키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요구와 시민들의 필요에 능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조직으로 평가되고 있다(이희완, 2013; 두성림 외, 2020:39).

〈표 3〉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5)]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사업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금융, 보험업 제외	* 공익사업 40%이상 수행 –지역사회 재생, 주민 권익 증진 등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 일자리 제공 –국가, 지자체 위탁사업 –그 밖의 공익증진 사업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이상	잉여금의 30/100이상
배당	배당가능	배당금지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자료: 협동조합 홈페이지(http://www.coop.go.kr, 2022.1.27)

2. 선행연구의 검토

본 연구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생존과 주요한 영향요인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경제적·사회적 성과를 분석하고 그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 사회적기업의 생존분석, 그리고 사회적 경제조직의 네트워크 요인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5) 협동조합 추진체계는 기획재정부가 협동조합 정책을 총괄·조정역할을 수행하고, 각 부처는 소관 분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감독(시행령으로 위임), 시도는 일반협동조합의 신고수리를 담당한다. 또한, 협동조합 관련 실태조사는 2년 주기로 하며 기본계획 등 정책의 수립, 인가·감독 등을 협의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정책협의를 실시한다.

1) 협동조합 성과의 영향요인

김세운 외(2019)는 협동조합 경영공시자료를 활용하여 협동조합의 조직성과요인을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조합의 성과를 경제적 성과(당기순이익)와 사회적 성과(지역사회 기여실적)으로 구분하고, 독립변수로 조직요인(설립연도, 직원비율, 설립목적, 홈페이지), 의사결정요인(의사결정기구 수, 겸직임원비율), 경제요인(자본금, 출자금, 영업외 수익)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인증유형(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따른 성과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적 성과에는 홈페이지, 겸직임원비율, 자본금이 정(+)의 영향을 미쳤고, 직원비율, 출자금은 부(-)의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성과에는 설립목적, 홈페이지가 정(+)의 영향을, 의사결정기구 수는 부(-)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인증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탐색한데 의의가 있다.

유두호·황정윤(2018)은 조직이 보유한 자원의 중요성에 주목하는 자원기반이론을 토대로 112개 취약계층 고용형 사회적협동조합 성과요인을 분석하였다. 조직의 성과는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로 구분하고 독립변수로서 조직의 내부자원으로 출자금총액, 조합원 수, 외부자원으로서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채택수,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액으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내부자원인 조합원 수가 많을수록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가 모두 높아져 인적자원이 조직성과에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증명하였다. 반면 나머지 요인들은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 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외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박성훈·김창범(2017)은 SBM 초효율성 분석을 이용하여 취약계층 고용형 사회적협동조합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업종별 분석에서 사회서비스업이 기타산업에 비해 평균효율성이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사회적협동조합이 수도권보다 평균효율성이 높았다. 사회서비스업의 경우 동종 소규모 사회적협동조합 간에 협력과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규모화가 필요하며, 기타산업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취약계층 고용과 매출액 증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유두호·엄영호(2020)는 85개 취약계층 고용형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 요인을 분석하였다.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취약계층 고용인원 수를 측정하였으며, 독립변수로는 내부요인으로 여유 자원(매출액, 영업이익), 네트워크(이사회개최 횟수)를 외부요인으로는 지방정부의 역량(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채택 수, 자치단체의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액)을 선정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조직의 특성(조직규모, 조직연령, 조직유형)을, 지역의 특성(지역총생산, 자치단체 인구 규모) 등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직의 풍부한 여유자원과 활발한 네트워크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적가치창출을 높였지만, 지방정부의 역량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사회적협동조합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적합한 정책수단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최유진(2017)은 광역과 기초단체의 사회적 경제증진조례가 협동조합의 활성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광역과 기초조례 모두 효과가 크게 나타나 기초의 경우 협동조합을 창업하는 사회적기업가와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조직체 정비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지역 내 집적할수록 사회적기업가 정신이 활성화되고 협동조합의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 장승권 외(2018)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239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시자료와 실태조사를 토대로 재무성과, 고용성과, 민주적통제 및 공동체기여 등을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매출액은 연평균 32.8%, 당기순이익은 연평균 17.3%, 자산은 연평균 29.8%씩 증가하였으며 성장성과 수익성이 높아져 규모화하는 협동조합이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자산규모인 출자금이 매출액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고 출자금 규모의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평균 피고용인 수도 매년 증가하였으며 특히 돌봄, 의료분야 사회서비스의 경우 협동조합의 고용창출 및 안정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서지영 외(2014)는 연구개발 분야의 사회적협동조합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향후 육성방안을 조사한 결과, 사회적 경제주체의 설립과 참여의 저해요인으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개념 부족과 낮은 인지도로 나타났으며, 지속가능성을 위한 요인으로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한 지원방안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해외사례의 경우, Barbaba et al.(2015)는 이탈리아의 사회적경제조직의 재정 및 운영성과요인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경제조직에도 영리기업의 성과요인인 재무 및 운영요인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즉 사회경제적 변수인 영업이익률, 금융수익 등이 재무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조직의 생존 및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것을 실증분석하였다.

Bontis et al.(2018)은 이탈리아 151개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지적자본(intellectual capital, IC)이 재정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지적자본의 하위구성요소로 인적, 구조적, 관계적 자본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분석결과 인적자본요소가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기업사명과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관리자의 역량을 강조하였다. Nader & McNulty(2017)는 미국의 비영리조직인 키바(KIVA)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고 키바가 초기 경쟁사업자들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성장한 요인으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후원자와 수혜자 간의 매칭 비즈니스모델이 존재했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Luttunen(2000)은 폐업한 기업과 생존기업을 비교 연구하여 기업생존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조직 외부네트워크보다는 조직 내부네트워크가 주요한 생존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생존한 조직의 경우 기업 내부네트워크가 강한 유대관계로 결속되어 집단 내 업무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복잡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켜 구성원간 상호신뢰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직 내부네트워크는 기업의 전략적 관리에 참여케 하고 조직을 기업가적 팀으로 이끌어 생존율을 높였다. Bond(2009)는 협동조합 이사회의 역할과 성과에 주목하고 협동조합 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기업의 이사회와 유사하게 협동조합 이사회도 협동조합의 성과제고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 이사회는 경영진의 성과를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으며 경영진이 수행한 재무 및 전략적 계획 등을 이해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협동조합의 성과평가에서 재무적인 성과 외에 비재무적인 성과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Ridley-Duff(2009)는 영국의 각 5개의 공동소유협동조합(CIC)과 개별지분소유협동조합(CLS)을 대상으로 경영방식, 재정접근성, 성장의 차이를 분석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적합한 기업의 경영방식과 조직체계, 재정적 측면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경영자는 관

리보다 민주적 관리자 유형으로 코칭역할이 중요하며, 공동소유와 개인소유를 결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소유분배구조가 필요하고 사회적경제에 투자할 수 있는 자본창출을 위한 기금을 강조하였다.

2) 사회적기업의 생존요인

사회적협동조합의 생존분석은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앞서 진행된 사회적기업의 생존분석을 참고하여 주요 생존요인을 탐색해 보기로 한다. 사회적기업의 생존분석은 길현종 외(2014)가 2013년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6개년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적기업의 생존과 인증취소위험요인을 분석한 바 있다. 이후 이영수 외(2017)는 3개년도 자료를 추가하고 Cox 비례위험모형(the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을 이용하여 생존분석을 시도하였다. 사회적기업이 매년 제출하도록 의무화된 사업보고서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으며, 주요변수로는 지역, 사업분야, 조직형태, 인증유형, 영업이익, 정부지원금액, 기업규모, 취약계층비율 등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생존 및 사회적기업의 인증취소·반납위험률에 유의한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추가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인증연도의 경우 2007년도 이후에 인증받은 기업이 생존율이 높았고, 지역별로는 부산, 대구, 전북, 제주에 위치한 기업의 생존율이 낮게 나타나 지역별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영업이익이 존재하고 정부지원이 높을수록 생존율이 높고 총고용규모 및 취약계층고용 비율도 생존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상호작용 효과분석에서는 정부지원과 기업규모, 소재지와 정부지원, 소재지와 기업규모, 소재지와 취약계층비율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근까지의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광범위하게 생존분석을 심층적으로 시도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김우영(2017)도 충남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의 생존분석을 시도하였다. 주요변수로는 사회적기업 대표의 성별, 기업형태, 지역(시/군), 지역실업율 등으로 선정하였고, Kaplan-Meier 생존함수를 추정하여 분석하였다. 충남의 경우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생존율이 51%였으며, 49%가 이탈하여 상당히 많은 정부보조가 낭비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여성대표자의 생존율이 높았고, 영농법인의 생존율은 낮다는 것을 밝혔다. 이 연구는 종단면자료를 확보하고 설문조사결과를 병행하여 생존분석을 시도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지만, 충남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

3) 사회적 경제조직의 네트워크 요인

사회적경제조직과 네트워크 간의 관계 연구는 경제주체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협동조합의 경우는 협동조합의 7대 원칙 가운데 '협동조합 간의 협동'의 맥락과 연관하여 협동조합의 네트워크 역량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연구(Roelants et al, 2012; 신명호·이아름, 2013; 정규호, 2013; 이호중, 2013)가 이루어졌으며, 사회복지조직은 네트워크의 효과성 및 활성화에 대한 연구(장연진, 2010; 전광현, 2004; 김준기, 2006; 류기형 외, 2009)가 수행된 바 있다. 사회적기

업의 경우도 정부지원정책과 사회적 네트워크의 영향(김용태, 2012),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연구(양세진, 2011), 사회적기업간 네트워크 특성과 조직성과(이재희, 2015), 사회적기업의 정책네트워크 특징(조상미·김진숙, 2014) 등으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네트워크 요인이 조직의 생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Menzani, T & V. Zamagni(2010)는 30년간의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네트워크 유형을 분석한 결과 네트워크의 형성이 매우 집약적이고 규모화될수록 협동조합의 성공과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Davern, M(1997)은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s)의 구성요소를 구조, 자원, 규범, 역동성 요소 등 4가지를 제시하고 사회·경제조직의 연구에서 네트워크의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Peters & Pierre(1998)는 이해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가 협동조합의 경쟁력과 사회서비스의 질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Lopez-Arceizet et al.(2017)은 스페인의 사회적경제조직(SEO) 714개를 대상으로 재정적 스트레스 경험과 조직의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조직의 절반이 재정적 스트레스를 경험하였으며 특히 다양한 외부조직과의 협력적 네트워크가 경제적 불황기에 살아남고 조직의 생존율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oldman & Kahnweiler(2000)은 비영리조직의 협업 종사자 92명의 이사를 대상으로 네트워크성과를 분석한 결과 협력의 경험이 조직의 성공을 이끌었고 숙련된 협력적 리더의 필요성을 발견했다. 특히 전략적 의사소통의 필수자질을 갖춘 리더는 여러 조직과 함께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간 네트워크 활동은 조직구조의 성장과 생존을 가능케 하였다. 또한, 리더의 역할로 정부와 재단의 기업자금지원지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였다.

Roelants et al.(2012)은 협동조합의 7대 원칙을 미시적 수준(Micro level), 중시적 수준(Meso level), 거시적 수준(Macro level)으로 구분하고 중시적 수준으로 제4원칙(자율과 독립), 제5원칙(교육과 정보), 제6원칙(협동조합 간의 협동)으로 제시하며, 협동조합간 협력이 시장경쟁력을 가지는 중요한 요소로 주장하였다. Baron & Markman(2000)은 사회적기업가의 성공요인으로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Social Skill) 역량을 강조하며 이와 관련된 사회적기술훈련을 제시하였다. 사회적기술은 사회적기업가의 사회적자본 형성에 크게 기여하여 금융 및 정보, 시장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네트워크확장에도 기여하여 조직의 성공을 이끈다고 주장한다.

신명호·이아름(2013)의 연구에서도 사회적자본의 관점에서 원주지역의 협동조합의 네트워크의 효용을 분석한 결과 타지역에 비해서 협동조합과 조합원, 실무자들과 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새로운 협동조합을 생성하고 확산하며 조직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의 호혜와 협력, 신뢰라는 사회적자본의 형성이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활성화에 유효하게 작동함을 증명하였다. 김복태 외(2016)는 네트워크역량이 조직성과의 주요변수임에 주목하고 수도권지역의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자금조달성과에 네트워크의 다양성, 출자금액, 협동조합유형, 총회개최주기가 주요한 요인임을 밝혔고, 시장참여 및 진입성과에는 네트워크 다양성, 총회개최주기가 유효함을 규명하였다. 정규호(2013)도 원주시의 협동

조합운동의 역사를 네트워크의 역할 측면에서 정리하고 분석한 결과 협동사회경제에서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조합의 매출액과 고용이 증가하였고, 상호부조와 협업시스템으로 연대기금조성, 상호부조 시스템의 구축 등 지역사회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국내외의 연구결과에서 보듯 협력적 네트워크의 형성은 협동조합의 생존 및 성장을 가능케 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검토한 선행연구들은 사회적경제 주체별로 조직의 특성에 따른 성과요인을 선정하여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10년이 경과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생존과 지속가능성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주요 성과요인들을 참고하여 조직요인, 재정요인, 정부정책요인, 사회적가치추구요인, 네트워크요인 등 5가지로 구분하였고 전국을 대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생존율과 생존기간, 생존의 주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생존분석을 시도하였고, 주요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생존율 증대방안을 분석하였다는 데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Ⅲ. 분석모형 및 연구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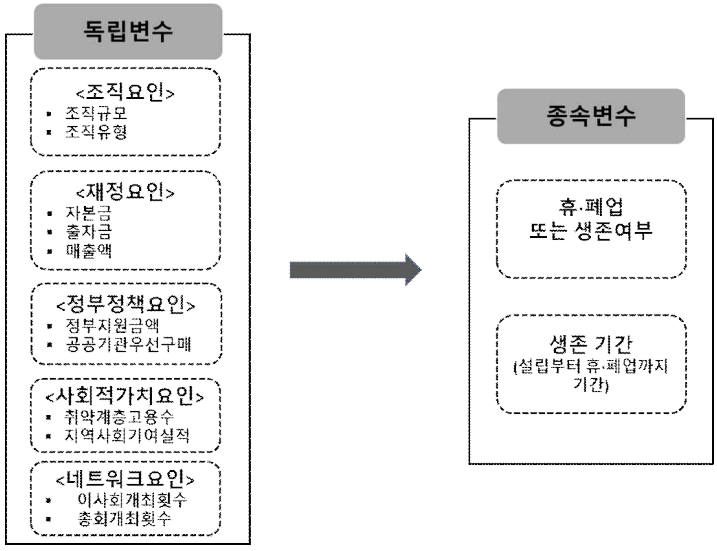
1. 분석모형과 연구가설

1) 사회적협동조합 휴·폐업 발생위험의 분석모형

본 연구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휴·폐업발생 시기 및 위험률, 휴·폐업 발생위험률의 영향요인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분석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독립변수 선정의 이론적 배경은 자원기반이론, 조직생태학적 이론, 네트워크 이론에 근거하여 구성하였다. 조직이 보유한 자원의 활용도가 조직의 성장과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자원기반이론(Resource Based View)을 바탕으로 재정요인, 정부 정책요인 등을 선정하였고, 조직의 규모가 조직의 성과 및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는 조직생태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조직요인을 선정하였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상호작용을 통한 연대와 협력이 활성화될수록 조직의 안정과 성장 등 조직의 생존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네트워크 이론에 근거하여 네트워크 요인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의 특성상 전체사업의 40% 이상을 반드시 공익사업으로 포함해야 하고 무엇보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가치추구요인도 중요한 변수로 판단하여 설정하였다.

〈그림 1〉 사회적협동조합 휴·폐업 발생위험에 대한 분석모형



종속변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휴·폐업 또는 생존 여부와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고 난 이후 휴·폐업 발생까지의 기간이다. 여기서 사회적협동조합의 휴·폐업 발생위험은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난 이후 휴업이나 폐업을 빨리 경험할수록 더 많은 위험이 있음을 의미한다.

2) 사회적협동조합 휴·폐업 발생위험의 영향요인과 가설

(1) 조직요인과 사회적협동조합의 휴·폐업 발생

조직생태학적 이론에 따르면 조직의 규모가 크고 오래된 조직일수록 성과 및 생산성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자원동원의 역량이 커진다고 주장한다(Hannan & Freeman, 1977; 유두호·황정윤, 2018:774). 조직생태학(organizational ecology)은 생물학의 자연선택이론을 조직에 유추·적용시킨 것으로 생태계(ecosystem)는 공동체와 사회적·기술적·경제적 환경이 공진화하고 상호작용하며 자원이 규칙적으로 순환하는 사회체계를 의미한다(Baum & Singh, 1994; 장현주, 2013:168). 또한 사회생태계내의 개인 또는 조직의 특정행위는 다른 행위자 및 조직의 변화를 야기하며 점차 그 조직이 활동하는 생태계를 변화시킨다고 본다. 환경이 차별적인 선택의 과정을 통해 조직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핵심요소가 되며, 환경에 의한 선택행위는 환경에 적합한 조직의 생존과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론적 과정으로 나타난다(김혁래, 1994; 박소영, 1995; 장현주, 2013). 또한 생태계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자원의 양과 특징이 사회적 행위자들 간 상호의존관계를 창출한다고 보며(정동일, 2009; 장현주, 2013: 167), 환경에 대한 조직의 전략적 선택보다는 조직의 적응을 강조하는 특성이 있다(정병결, 2011). 조직생태학이론에서는 조직군내에 존재하는 개별조직의 형태가 변이되고, 학습 및 모방을 시도하며 희소한 자원을 둘러싸고 조직간 생존경쟁이 발생하게 된다고 본다. 이 때 생존율이 높은 조직은 결국 환경에 의해 선택을 받은 것으로 이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직생태학이론은 수많은 조직들이 상호 경쟁하는 환경에서 조직이 생존하고 성장하며 보이는 특징을 규명하는데 유용하다(장현주, 2013:169). 조직생태학적 관점에서 협동조합의 환경변화는 2012년 기본법이 시행된 이래 수많은 협동조합 조직군이 형성되었는데, 이것은 조직내부나 자연발생적인 변화보다는 협동조합법이라는 인위적 요인에 의해 조직이 생존하고 성장, 소멸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경제조직은 희소자원의 경쟁과 같은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전략적으로 적응하기보다는 수동적으로 적응하려는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가 조성한 우호적인 정책환경속에서 생성되어 타성의 정도가 높은 편이며 지속가능성과 생존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김을식 외 2011; 장현주, 2013:166). 따라서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과 같이 조직의 성숙도가 낮은 기업의 경우는 생태계 내에서 생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도 동일한 맥락에서 조직의 규모가 작을수록 조직의 성과가 낮고 휴·폐업의 발생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조직의 특성상 영리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직의 생존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사회적경제 영역에 속한 사회적기업보다 더 큰 위험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대부분의 사회적협동조합은 급속한 양적성장에 비해 쉽게 조직이 해체될 수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유두호·엄영호, 2020:60).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도 조직의 규모를 키우고 참여구성원의 수를 확대할 때 생존 및 성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유두호·황정윤(2018:765-780)의 연구에서도 조직의 규모가 사회적협동조합의 성과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유형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유두호·엄영호, 2020:82-83). 일반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유형은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위탁사업형, 취약계층고용형, 공익증진형 등으로 구분된다(기획재정부, 2020:11). 사업목적에 따라 해당 부처의 인가를 받기 때문에 부처별로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고 공익사업의 특성으로 인해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편중된 경향을 보여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골고루 분포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유두호·황정윤, 2018:767). 따라서 해당 부처의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행정적 지원 등은 협동조합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조직의 규모, 조직유형 등은 사회적협동조합의 휴·폐업 발생위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재정요인과 사회적협동조합의 휴·폐업 발생

자원기반이론(Resource Based View, RBV)은 조직이 보유한 자원의 중요성에 주목하는 이론으로서 조직이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적으로 특정 자원을 보유하거나 새로운 자원을 창출하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Barney, 2001; Bryson, Ackerman & Eden, 2007; 유두호·황정윤, 2018:769). 자원의 개념은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다양한 자산과 역량, 조직절차들, 지식 및 정보 등을 포함한다(Barney, Wright & Ketchen, 2001; 김권식·이광훈, 2014:115). 이러한 자원[6]은 조직에 가치를 부여하며 현재 및 미래의 잠재적 경쟁자들이 갖지

6) 자원의 유형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제시한다. Wernerfelt(1984)은 유·무형의 자산인 브랜드, 내부기술지

못할 정도로 희소하며, 쉽게 모방할 수 없으며, 경쟁자들이 확보한 다른 자원으로 거래나 대체가 불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자원에 기반한 조직의 성과는 경쟁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부적 요인들이 아닌 조직 내부적으로 특정자원을 보유하거나 새로운 자원을 창출하는 역량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barney, 1991; 김권식·이광훈, 2014:115 재인용). 또한 조직은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조합하여 목표를 달성하며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여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Hamel & Prahalad, 1990; 김권식·이광훈, 2014:116).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원으로는 재무적 자본(기금, 사업소득, 기부, 대출), 인적자본(자원봉사자, 관리자, 직원), 사회적 자본(사회적 관계지식, 고객, 자금조달), 무형적 자원(효과적 프로세스와 업무수행으로 산출물을 생산하는 암묵지)등을 제시할 수 있다(Meyskens, Carsrud & Cardozo, 2010; 유한나·민동권, 2015:168). 사회적기업의 경우 다양한 사회적 교류 네트워크상의 참여를 통해 외부환경에서 다양한 자원을 내부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원에 대한 유연한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자원을 활용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Dacin, Dacin & Matear. 2010; 유한나·민동권, 2015:167-168).

사회적협동조합도 사회적 생태계가 열악하기 때문에 조합이 보유한 자원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따라 조직의 생존과 성장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자원으로는 대표적으로 협동조합의 자본금, 출자금, 매출액 등을 들 수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이러한 자원의 확보와 활용이 용이할 때 조합의 목표인 사회적·경제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단순한 생존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김세운 외(2019:182)의 연구에서도 협동조합의 경제적 성과인 당기순이익에 자본금이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유두호·엄영호(2020:82-83)의 연구에서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사회적성과 창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자본금, 출자금, 매출액 등은 사회적협동조합의 휴·폐업 발생위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정부 정책요인과 사회적협동조합의 휴·폐업 발생

협동조합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출자금뿐 아니라 정부 및 민간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조직의 특성으로 인하여 재정자원의 동원능력은 협동조합이 목표를 달성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Vazquez, Alvarex, and Santos, 2001; 김복태, 2016:10). 즉 외부자원을 활용하여 내부화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외부자원으로는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일반시민 등 다양한 영역이 존재한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에 속한 대부분의 조직들은 정부를 통해서 많은 자원을 지원받고 있다(유두호·황정윤, 2018:770). 최근 정부에서도 100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이

식, 숙련된 직원의 고용, 기계, 효율적 프로세스, 자산 등을 들고 있고, Russo & Fouts(1997)은 물리적 자산, 기술, 인적자원, 조직적 역량, 무형적 자원(평판, 정치적 감각)등을 제시하고 있다. Fry, Stoner & Hattwick(2004)은 인력, 물리적 원료(materials), 재정적 자산, 정보 등을 주장하였다.

분야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도 강조되고 있는 만큼 정부지원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정책은 협동조합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유두호·엄영호(2020:71)의 연구에서도 정부지원이 중단된 이후 조직이 급격하게 생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직운영이 결정됨을 지적한 바 있으며,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가 광역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까지 참여시켜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 창출을 위한 자원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유두호·엄영호, 2020:73)이 있다. 최근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으로부터 구매한 물품의 총액수가 증가하고 있다(〈표 4〉 참조).

〈표 4〉 사회적 경제조직 제품 구매 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총구매액(A)	사회적경제조직 제품구매액(B)	비율(B/A)
2013	38,858,926	263,186	0.68
2014	37,225,488	355,026	0.95
2015	38,496,886	595,727	1.56
2016	41,117,067	740,139	1.80
2017	46,309,231	942,815	2.04
2018	46,755,468	1,059,549	2.27
2019	51,255,571	1,282,950	2.50
2020	56,872,896	1,622,458	2.85
2021	65,501,165	1,817,072	2.77

자료: 고용노동부(2013-2021)

이러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생존과 성장에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정부지원금액, 공공기관 우선구매액은 사회적협동조합의 휴·폐업 발생위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사회적 가치 추구요인과 사회적협동조합의 휴·폐업 발생

사회적경제 내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과 함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을 강조한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과 서비스 창출에 주목적을 두고 사회적 가치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 2조1호에서도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은 전체사업의 40% 이상을 반드시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일반협동조합과 달리 조직의 특성상 특수한 성격이 있다(유두호·엄영호, 2020:65). 즉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가치추구를 위해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조직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다.

취약계층고용의 비율이 사회적기업의 인증유지확률을 높이며(이영수 외, 2017:173), 취약계층

고용이 협동조합의 경제적 성과를 높이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고용 창출 및 고용 안정성을 제고시켜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가져온다[7](장승권 외, 2018:80-81)는 것이 입증되었다. 또한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때 생존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의 생산활동증가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성과를 높인다는 연구(강민수, 2016; 임욱빈 외, 2016:119-139)와 지역사회의 고용과 부의 균형적 분배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논의(Birchall, 2013; 강민수, 2016; 김복태·김대진, 2015; 김세운 외, 2019:186) 등이 있다. 즉 사회적협동조합은 경제적 가치추구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사회적 기여 및 연대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취약계층 고용인원 수, 지역사회 기여실적 등은 사회적협동조합의 휴·폐업 발생위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네트워크(Network) 요인과 사회적협동조합의 휴·폐업 발생

네트워크[8] 이론에 따르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공유하고 보완함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강조한다(Gulati et al, 2000; 유두호·엄영호, 2020:70). 즉 네트워크의 참여와 상호작용을 통한 협력의 증대는 곧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O'Toole & Meier, 1999; Uzzi, 1997; Provan & Milward, 1995; 유두호·엄영호, 2020: 69-70).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 네트워크는 영향력과 관계정도, 관계의 범위까지 포함하며 소통에 의해 형성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영역과, 조직과 조직간에 형성된 연계의 체계로 볼 수 있다(Rizova,2006; 조상미·김진숙, 2014:285). 네트워크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Chrislip & Larson(1994)는 네트워크를 연계수준에서 연락, 제휴, 조정, 협력, 통합으로 설명하며, Alter & Hage(1993)은 조직간 거래의 상호작용, 공동행동, 공동산출의 사회적 형태로, 김석준 외(2000)는 공공서비스전달과 관련된 상호연계되고 공통의 이해를 가진 모든 조직체로 정의하기도 한다. 사회적경제조직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양한 조직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재무적, 인적, 사회적, 무형적 자원을 확보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조직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Meyskens et al., 2010: 최영근, 2013; 유한나·한상일, 2021: 4).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안 모색을 위한 폭넓은 참여를 확보하여 자원 활용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이해관계자로서 정부의 의사결정과 정책집행과정에 참여하여 지역상황과 정보를 반영하게 하고 집행의 효

7) 장승권 외(2018:81)에 따르면 협동조합 피고용인 중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은 2015년 20.2%에서 2017년 34.7%로 증가했고,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41.0%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 네트워크는 관계망, 연계망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집단의 체계화된 관계의 구조적 형태로 설명될 수 있다(김용학, 2010). 또한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의 집합이라 볼 수 있고 관계를 통하여 무엇이 어느 정도 교환되는지에 대한 질적인 내용과 네트워크의 체계화된 양적인 구조 측면에서 다차원적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Waserman & Faust, 1994; 류기형 외, 2009; 이재희, 2015; 김복태 외, 2016:4).

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Ansell & Gash, 2007; Smith, 1998; 유한나·한상일, 2021). 협동조합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상호작용하여 연대와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즉, 조직 구성원들 간의 네트워크 또는 다른 조직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조직의 생존과 안정, 그리고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조직의 설립목적이 이윤창출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가 강조된다. 즉 조합원들의 참여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고, 불확실한 조직 환경에서 조합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가 매우 중요하다(유두호·엄영호, 2020: 69).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에는 이사회, 총회 등이 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기업의 이사, 사외이사, 근로자, 서비스수혜자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협동조합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다(유두호·엄영호, 2020:70). 또한, 협동조합의 참여주체들이 정기적이고 상시적인 만남을 통한 활발한 상호작용은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제적·사회적 성과 창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도 사회적협동조합의 네트워크가 활발할수록 조직의 사회적 가치창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두호·엄영호, 2020:82-83). 그리고 30년간의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네트워크 유형분석에서도 네트워크의 형성이 매우 집약적이고 규모화될수록 협동조합의 성공과 확산에 기여함을 도출하였다(Menzani, T & Zamagni, 2010: 98-127). 소셜네트워크(Social Networks)의 4가지 구성요소[9]를 제시한 Davern, M(1997)도 사회경제조직에서 네트워크의 유용성을 입증하였고, Peters & Pierre(1998)도 이해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가 협동조합의 경쟁력과 사회서비스의 질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이외에도 조합의 네트워크 활용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최석현·남승연, 2015), 원주지역의 협동조합과 조합원, 실무자들간의 네트워크형성이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활성화에 유효함을 확인한 연구(신명호·이아름, 2013), 네트워크의 다양성과 총회개최주기가 자금조달성과와 협업시스템 구축에 긍정적 영향을 확인한 연구(김복태 외, 2016) 등이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네트워크 요인은 사회적협동조합의 휴·폐업 발생위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9) Davern, M(1997: 289)가 제시한 4가지 구성요소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적 요소(structural component)는 네트워크 내의 행위자와 관계의 정도를 말하며, 이는 네트워크 분석의 기본적 구성요소이다. 둘째, 자원요소(resource component)로서 이는 사회 내의 행위자들 사이에서 구별되는 다양한 특성의 네트워크 내의 분배를 말한다. 그 예로는 능력, 지식, 민족성, 재산, 성별 및 계급 등이 있다. 셋째, 규범적 요소(normative component)는 다양한 네트워크 내에서 행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 및 명백한 규칙을 말한다. 즉 행위자 간의 신뢰 수준이나 행동을 지배하는 명백한 규칙 등이다. 넷째로 역동적 구성요소(dynamic component)로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변화하는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기회와 제약요소 등을 말한다. 그의 연구는 사회경제 현상의 연구에 있어서 소셜네트워크의 기반을 형성하는 4가지 기본 범주를 개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2.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매년 사회적협동조합들이 경영과 관련된 자료들을 제시하고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이를 취합하여 제시한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협동조합 웹사이트(www.coop.go.kr)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율경영고시 자료가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자료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구축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5개년도)를 분석에 활용하였다.[10] 해당 자료는 기업의 경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협동조합의 기본정보와 재정 및 성과, 활동 상황, 사업 결과 등을 제공한다. 또한, 경영공시자료를 통하여 조직의 규모와 유형, 정부지원금액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금액, 총회 및 이사회개최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조사지역은 전국에 소재한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생존율 및 생존 기간의 차이, 주요 생존요인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2) 분석방법 및 측정지표

(1) 분석방법

본 연구의 가장 주요한 분석방법은 생존분석법(survival analysis)이며, SPSS 27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생존분석은 어떤 특성을 가진 관찰대상을 일정기간 추적하여 기간별로 현 상태에 머물러 있을 생존율(사망률)을 파악할 수 있으며, 기간별로 생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의 범주에 따른 생존율(사망률)의 차이,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등을 분석하는데 사용된다(곽기영, 2019). 또한 사건의 발생여부에 대해 불확실한 자료(censored data)가 포함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의학분야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11](송경일·안재억, 2006:27). 여기서 사건이란 환자의 사망뿐만 아니라 어떤 처리에 대한 반응이나 질병의 재발이 포함되며 시간이란 수술 후 사망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남기정·이동명, 2018:64).

본 연구에서 사건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휴·폐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휴·폐업이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을 생존시간이라 한다. 휴·폐업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면 생존율이 높고 짧으면 생존율이 낮다. 생존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때 항상 중도절단자료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일반적인 통계적 방법과 구별된다(이영찬, 2011; 남기정·이동명, 2018). 중도절단은 연구기간 내에 특정사건이 관측되지 못하고 연구가 종료되거나 연구대상에서 낙오되어 부분적으로

10) 분석대상 시점을 2016년부터 한 이유는 2013년도는 설립인가 조합이 111개로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설립 이후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개수가 적었으며, 2014년도는 182개 설립, 2015년도는 324개 설립, 2016년도에는 510개가 설립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원유형과 조직유형별 분석, 분석자료수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 2016년을 연구시작 시점으로 하였고, 2016.1.1.설립한 510개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2020.12.31.까지의 생존율을 추적관찰하였다.

11) 사회과학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탈피, 빈곤자탈피, 실업자 재취업 등의 경우 생존분석을 사용하여 일정기간에 따른 생존율(사망률)을 파악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곽기영, 2019:72).

관찰되는 것을 말한다(박강민·김준연, 2018:12).

일반적으로 중도절단 자료의 유형은 Type Ⅰ,TypeⅡ, Type Ⅲ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Type Ⅰ은 연구시작시점과 종료시점이 미리 정하여짐으로 발생하는 중도절단을 말하며, Type Ⅱ은 미리 일정한 사건발생수를 정하여 충족될 경우 연구를 종료하면서 일어난 중도절단이며, Type Ⅲ은 연구진입시기가 다르고 중도절단된 시기도 다른 경우로 임의중도절단된 경우이다(이근우 외, 2015; 김태훈, 2009). 본 연구대상이 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생존자료는 연구시작시점과 종료시점이 미리 정하여짐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Type Ⅰ의 중도절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중도절단자료는 연구종료시점까지 생존한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본 연구는 생존분석법 중 생명표분석(life table analysis)과 콕스회귀분석(Cox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생명표분석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이후 생존기간 및 생존율 또는 위험률 등을 알기 위해 사용하며, 콕스회귀분석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이후 생존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 사용한다. 생명표분석은 시간에 따른 사건발생자료에 대한 생존함수를 비모수적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중도절단 대상 자료에 대해 일정연구기간과 간격에 대해 생존가능성을 계산하는 유용한 분석법이다(성길용, 2019:290). 즉, 어떤 특성을 가진 모집단(예, 유방암환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서 일정기간에 따른 생존율을 파악하거나, 집단 간에 일정기간에 따른 생존율이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는데 사용된다[12](곽기영, 2019:84).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이후 5년차까지 생존기간 및 생존율 또는 위험률을 분석하는데 적합하며, 정부지원유형 및 조직유형별 생존율도 분석할 수 있다.

생존함수의 추정방법에는 크게 비모수적모형, 모수적모형, 반모수적모형 등 3가지가 있다. 비모수적방법은 특정한 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한 집단의 생존기간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생명표법과 카플란-마이어분석(Kaplan-Meier)이 있는데 자료의 생존기간이 짧고 연구기간 설정이 명확하며 관측대상의 수가 50이상인 경우 생명표분석[13]이 유용하다(송경일·최종수, 2008; 이근우 외, 2015; 62). 본 연구는 연구기간 설정(2016~2020년)이 명확하고 패널자료이며 관측대상의 수가 50이상(분석대상 510개)이기 때문에 생명표분석을 사용한다.

콕스회귀분석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이나 다중회귀분석과 비슷하지만 종속변수가 2개라는 점에서 다르다. 즉 종속변수가 사건의 발생까지의 기간과 발생여부, 2가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자료수집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분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Singer & Willet, 1993; 이영리 외, 2015:33; 곽기영, 2019:151). 또한, 콕스회귀분석은 분석대상의 분포에 대한 특별한 가정이 없이 관측 자료를 활용해 위험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활용해 생존기간

12)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후 1년, 2년, 3년··· 후에 수급자유지율(또는 탈피율), 또는 특정한 변수의 범주(학력, 과거직업경험, 자활의지 등)에 따라 1년, 2년, 3년··· 후에 수급자유지율(또는 수급자탈피율)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는데 사용된다.

13) 생명표분석을 위한 자료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 일정한 시간적 간격일 두고 조사된 자료 즉 패널자료가 있어야 한다. 둘째, 종속변수는 사건발생까지의 기간과 사건발생여부(사망 또는 생존) 2개의 변수가 있어야 한다. 셋째, 집단 간의 생존율 비교분석을 위해서 표본수가 50 이상 될 것이 요구된다(곽기영, 2019: 84).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 분석법이기 때문에 의학, 인문사회영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성길용, 2019;290).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사건발생까지의 기간(1~5년)과 사건발생여부(생존, 휴·폐업) 2개를 사용하며, 중도탈락된 자료도 분석에 포함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휴·폐업까지의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하기 위해 콕스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2) 측정지표

종속변수인 사회적협동조합의 휴·폐업 발생위험률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고 휴·폐업되기까지의 기간이므로 비율변수이며, 독립변수는 비율변수 또는 범주형 변수를 사용한다. 범주형 변수는 더미(dummy)변수로 만들어 사용한다.

① 사회적협동조합 휴·폐업 발생의 종속변수

생존분석을 위한 종속변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휴·폐업 발생까지의 기간이다. 즉,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고 난 이후 휴·폐업 문제가 발생하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생존 년수(survival year)로 측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생존은 2016년부터 설립하고 2020년 12월 말까지 생존한 사업체를 말하며, 생존한 조합은 0으로, 폐업한 조합은 1로 처리하였다. 폐업여부에 대한 판단은 협동조합 홈페이지 검색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자료가 없거나 기재한 경우라도 모든 수치값이 0인 경우는 사망처리 즉 폐업(이벤트발생)으로 간주하였다.[14)]

② 사회적협동조합 휴·폐업 발생위험의 영향요인

생존분석에서 종속변수를 제외한 독립변수의 경우는 비율변수 및 범주형변수로서 영향요인별 측정지표는 〈표 5〉와 같다.

〈표 5〉 사회적협동조합 휴·폐업 발생위험의 영향요인별 측정지표

구분		측정지표
조직요인	조직규모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조직유형	지역사업형(1),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2), 위탁사업형(3), 취약계층고용형(4), 공익증진형(5)
재정요인	자본금	(단위: 원)
	출자금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단위: 원)
	매출액	사회적협동조합의 연간 매출액(단위: 원)

14) 물론 경영공시참여가 의무이행사항이지만 단순 미참여를 폐업으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세청 및 관할세무서에 개별사업체들의 휴·폐업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고, 통계청(기업생멸행정통계)에서도 실제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매출액과 상용근로자가 없는 상태가 1년 이상인 기업을 소멸기업(폐업)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경영공시자료가 없는 사업체의 경우 당해연도부터 2020년까지를 추적조사하고 지속적으로 미참여인 경우 이를 휴업 또는 폐업으로 간주하여 설립 협동조합 대비 폐업하지 않은 협동조합의 비중을 생존율로 정의하였다.

정부정책요인	정부지원유형	정부지원 全無(1), 지원중단(2), 지원지속(3)
	공공기관우선구매액	사회적협동조합 소속지역별 사회적경제제품구매액
사회적가치추구 요인	취약계층고용인원수	사회적협동조합의 취약계층 고용 인원수
	지역사회기여실적	연간 지역사회기여 횟수
네트워크요인	이사회개최	연간 이사회개최 횟수
	총회개최	연간 총회개최 횟수

첫째, 조직요인은 조직규모와 조직유형을 사용하였다. 조직규모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수[15]이며 조직유형은 사업목적에 따라 구분되는 지역사업형(1),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2), 위탁사업형(3), 취약계층고용형(4), 공익증진형(5) 등 5가지이다. 조합원수 및 조직유형의 구분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결산보고서를 활용하였다.

둘째, 재정요인은 자본금, 출자금(총액), 사회적협동조합의 연간 매출액 등을 사용하였다.

셋째, 정부정책 요인은 정부지원유형, 공공기관 우선구매액 등을 사용하였다. 정부지원유형은 정부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조합(1), 정부지원을 받다가 중단된 조합(2),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은 조합(3)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사업결산보고서를 참고하였다. 공공기관 우선구매액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소속한 지역별로 사회적 경제제품을 구매한 액수로 측정하였다. 넷째, 사회적가치추구 요인은 취약계층 고용인원수와 지역사회 기여실적 등을 사용하였다. 취약계층 고용인원 수는 경영공시제도에 나타난 지표를 참고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취약계층 고용인원으로 측정하였으며, 지역사회기여실적은 경영공시자료의 활동상황을 참고하여 해당 연월일별 지역사회 활동 건수로 측정하였다. 다섯째, 네트워크 요인은 연간 이사회개최 횟수와 총회개최 횟수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협동조합은 1인 1표의 의결권과 조합자원을 공유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사회 및 총회의 개최 횟수를 통하여 네트워크의 활성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Ⅳ. 분석결과

1. 기술통계

〈표 6〉은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설립하고 운영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요변수별 기술통계량을 나타낸다. 자본금, 매출액, 총회개최횟수, 이사회개최횟수, 지역사회기여횟수, 조합원수, 출자금, 자산, 정부지원금 등은 모두 생존한 사회적협동조합의 평균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우선구매액, 취약계층고용인원등에서는 폐업한 사회적협동조합의 평균이 생존조합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생존한 조합들은 공공기관우선구매액과 취약계층고용인원 변수

15) 조합원은 생산자, 소비자,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으로 구성되며, 총회에 참석하여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과 출자의무를 가진다(박성훈·김창범, 2017; 유두호·황정윤, 2018:773).

를 제외하고 나머지 변수들에서는 모두 전체평균값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6]

〈표 6〉 주요 변수별 기술통계량

(단위: 금액: 원/횟수: 회/인원: 명)

구분	폐업(N=214)		생존(N=296)		전체(N=510)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본금	28,848,738.99	96,330,872.22	184,967,207.82	669,251,377.97	119,458,673.83	519,054,446.61
매출액	262,283,714.62	905,819,518.01	782,629,087.23	1,861,892,183.11	564,288,087.74	1,555,178,511.08
총회개최 횟수	3.44	2.28	7.25	2.66	5.65	3.13
이사회개최 횟수	7.79	10.31	18.98	14.97	14.28	14.31
지역사회 기여 횟수	4.00	15.43	19.32	88.27	12.89	68.35
조합원 수	59.03	144.27	238.93	754.78	163.44	588.88
출자금	24,015,881.61	43,284,942.95	87,016,827.78	222,835,251.10	60,581,136.64	174,732,133.16
자산	85,340,979.05	184,008,922.76	919,820,508.52	7,396,707,893.83	569,666,353.01	5,647,387,915.35
공공기관 우선 구매액	9,371,290.94	8,500,871.51	9,182,795.03	8,944,595.94	9,261,889.39	8,753,167.14
취약계층 고용인원	265.63	3,840.89	7.88	30.34	116.03	2,488.00
정부지원금	12,778,837.56	57,310,390.68	37,591,209.98	165,426,413.36	27,179,743.90	131,852,458.38

주: 총회 및 이사회개최 횟수의 평균은 5년간의 총합계의 평균이며, 나머지변수는 모두 연간평균을 나타냄.

〈표 7〉 정부지원유형 및 조직유형별 특성

구분	변수	세부유형	빈도(조합 수)	비율(%)
정부정책요인	정부지원유형	1. 정부지원 全無	353	69.2
		2. 정부지원 중단	114	22.4
		3. 정부지원 지속	43	8.4
조직요인	조직유형	1. 지역사업형	208	40.8
		2. 사회서비스형	80	15.7
		3. 위탁사업형	73	14.3
		4. 취약계층고용형	98	19.2
		5. 공익증진형	51	10.0
전체			510	100.0

〈표 7〉은 정부지원유형과 조직유형별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성을 나타낸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설립하고 활동한 조합의 특성을 살펴보면, 정부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운영한 조합이 69.2%(353개)이며 정부지원의 중단이 22.4%(114개), 정부지원지속이 8.4%(43개)로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받는 조합의 비율은 매우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조직유형별로는 지역사업형이 40.8%(208개)로 가장 많았으며, 취약계층고용형과 사회서비스형이 각각 19.2%, 15.7%로 나타났다. 위탁사업형과 기타공익형은 각각 14.3%, 10%에 머물렀다.

16) 제5차(2020년말 기준)협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협동조합 전체의 평균자산은 2.5억원, 평균자본은 0.6억원, 매출액은 3.0억원으로 조사된 바 있다. 또한, 조합원수 10명이하 조합이 60.2%, 자산 1억원이하가 57.6%에 달하여 규모가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생명표분석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는 2016년에 설립부터 2020년까지 설립하고 운영한 사회적협동조합 총 510개로서 5년동안 폐업한 조합이 214개, 생존한 조합 296개가 생존분석 대상으로 사용되었다.

1) 전체 사회적협동조합 대상

생명표분석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이후 폐업이 발생하는 건수나 비율은 연도가 경과할수록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년차에 발생위험률이 25%(83개)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설립되고 운영된 사회적협동조합의 평균 중위 생존기간은 5년이며, 누적 생존비율은 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설립하고 운영한 조합의 생존율이 58%임을 의미한다.[17] 연도별로는 1년차에 폐업발생위험이 5.3%(27개), 2년차에 10.2%(52개), 3년차 10.2%(52개), 4년차 16.3%(83개)로서 4년차에 폐업발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8〉 생존기간 및 연도별 발생위험(전체 자료)[18]

구간	구간 입력수	위험 노출수	종료 사건수	종료 비율	생존 비율	누적 생존비율	확률 밀도	위험률
0	510	510	0	.00	1.00	1.00	.000	.00
1	510	510	27	.05	.95	.95	.053	.05
2	483	483	52	.11	.89	.85	.102	.11
3	431	431	52	.12	.88	.74	.102	.13
4	379	379	83	.22	.78	.58	.163	.25
5	296	148	0	.00	1.00	.58	.000	.00
평균(중위수) 생존 기간: 5년								

〈그림 2〉는 전체 사회적협동조합의 생존함수와 위험함수를 나타낸 것이다. 생존확률은 t시점까지 폐업하지 않고 생존할 확률을 말하며, 생존함수의 모양은 전반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다(생존율은 2년차 95%, 3년차 85%, 4년차 74%, 5년차 58%). 위험함수의 경우 4년차에 다른 기간에 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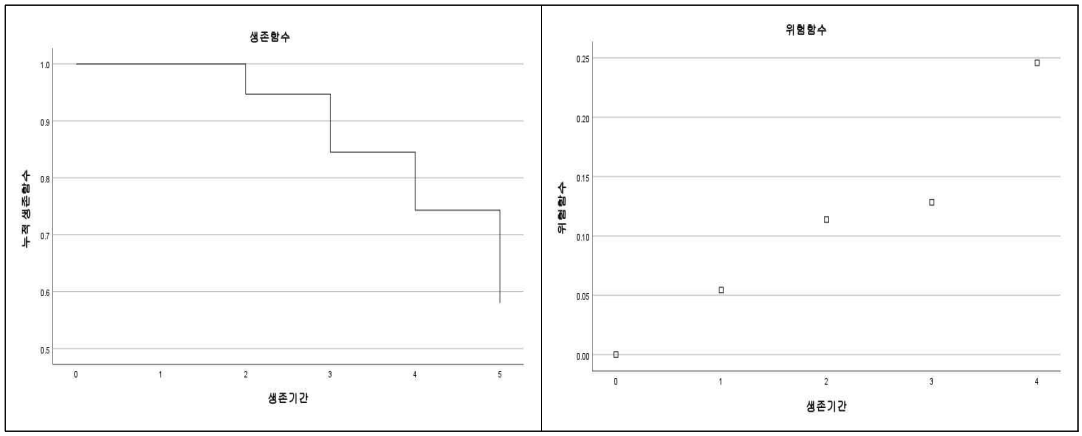
17) 제5차 협동조합 실태조사결과(2020년말기준), 운영률이 전체 49.5%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로운넷, 2022.04.08.). 서울시 일반협동조합의 경우는 2019년까지 5년 생존율이 63.5%였으며(일반기업 29.2%), 춘천시 일반협동조합은 2020년까지 7년 생존율 51.8%, 해외의 경우 영국 협동조합(2018)은 설립 후 5년 생존율이 80%(일반기업 44%), 포르투갈 협동조합(2018)은 75%생존율(일반기업 40%)을 보였다(http://sapenet.net/).

18) 〈표 8〉 생명표분석에서 구간의 숫자는 연차를 말하며, 구간입력수는 해당구간 시작시점에서 생존해 있는 사례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종료사건수는 해당구간 동안 사건발생 개수를 말하며, 누적생존비율은 현재구간말까지 생존케이스의 비율을 나타낸다. 확률밀도는 현재구간에서 단위시간당 사건발생활률을 의미한다.

급속한 위험증가율(25%)을 보이고 있다.

〈그림 2〉 전체 사회적협동조합의 생존함수와 위험함수

(생존기간 단위: 년)



2) 정부지원유형 및 조직유형별 생명표분석

본 연구에서 범주형 변수에 해당하는 정부지원유형과 조직유형별로 사회적협동조합의 폐업 발생위험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폐업의 발생에는 정부지원유형별로는 차이가 있었으나, 조직유형별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조직유형별에서 지역사업형과 위탁사업형간, 사회서비스형과 위탁사업형간에 폐업발생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였다.[19] 첫째, 정부지원유형별 폐업 발생위험의 차이를 Wilcoxon(Gehan)으로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0.001 이하에서 28.664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폐업발생의 연도별 경과를 살펴보면, 정부지원이 전혀 없는 조합의 경우 1년차에 5.4%(19개), 2년차 11%(39개), 3년차 11.9%(42개), 4년차에는 16.7%(59개)로 나타났으며, 4년차에 폐업의 발생위험이 가장 높았다. 정부지원을 받다가 중간에 중단된 조합의 경우는 1년차에 7%(8개), 2년차 11.4%(13개), 3년차 8.8%(10개), 4년차 20.2%(23개)였으며, 지원이 중단된 조합의 경우도 4년차에 폐업의 발생위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받는 조합의 경우는 4년차에 1건의 발생 외에는 폐업이 발생하지 않고 거의 모두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구간별 발생위험률을 보면, 지원이 없는 조합과 중단된 조합 모두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위험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정부지원이 없는 조합의 경우 4년차에 위험률이 26%, 정부지원이 중단된 조합의 경우는 32%로서 가장 높게 나타나, 4년차에 도래할 경우 조합의 내외부적인 운영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19) Wilcoxon(Gehan)으로 검정한 결과 지역사업형과 위탁사업형간에는 유의수준 0.05이하에서 5.037(유의확률 0.017)로 나타났으며, 사회서비스와 위탁사업형간에는 5.667(유의확률 0.02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9〉 정부지원유형별 폐업 발생위험 생명표분석

	구간	구간 입력수	위험 노출수	종료 사건수	종료 비율	생존 비율	누적 생존 비율	확률 밀도	위험률
정부 지원 없는 조합	0	353	353	0	.00	1.00	1.00	.000	.00
	1	353	353	19	.05	.95	.95	.054	.06
	2	334	334	39	.12	.88	.84	.110	.12
	3	295	295	42	.14	.86	.72	.119	.15
	4	253	253	59	.23	.77	.55	.167	.26
	5	194	97	0	.00	1.00	.55	.000	.00
정부 지원 중단	0	114	114	0	.00	1.00	1.00	.000	.00
	1	114	114	8	.07	.93	.93	.070	.07
	2	106	106	13	.12	.88	.82	.114	.13
	3	93	93	10	.11	.89	.73	.088	.11
	4	83	83	23	.28	.72	.53	.202	.32
	5	60	30	0	.00	1.00	.53	.000	.00
정부 지원 지속	0	43	43	0	.00	1.00	1.00	.000	.00
	1	43	43	0	.00	1.00	1.00	.000	.00
	2	43	43	0	.00	1.00	1.00	.000	.00
	3	43	43	0	.00	1.00	1.00	.000	.00
	4	43	43	1	.02	.98	.98	.023	.02
	5	42	21	0	.00	1.00	.98	.0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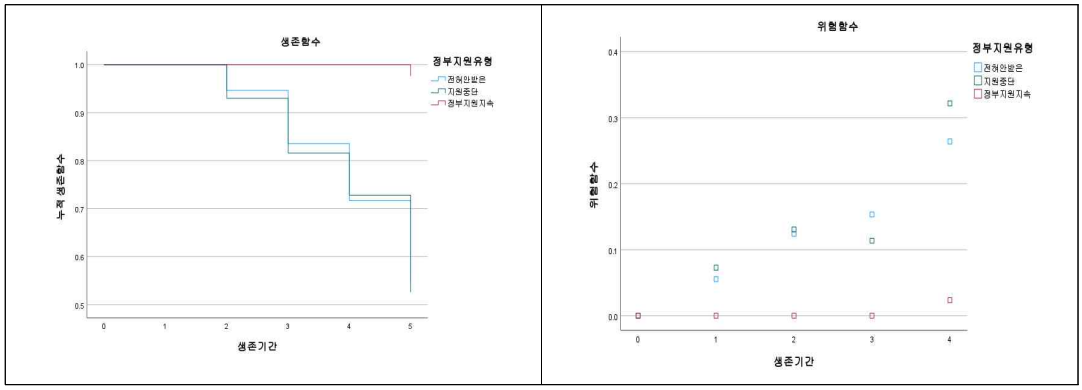
평균 생존 중위 기간: 5년

Wilcoxon(Gehan)통계량: 28.664, 자유도 2, 유의확률 0.000***

*p〈.05, **p〈.01, ***p〈.001

〈그림 3〉 정부지원유형별 생존함수와 위험함수

(생존기간 단위: 년)



둘째, 조직유형별 폐업 발생위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지역사업형과 위탁사업형, 그리고 사회서비스형과 위탁사업형간에는 유의수준 0.05이하에서 폐업발생위험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평균 생존기간은 위탁사업형이 4.7년이었으며, 나머지 조직유형은 모두 5년으로 나타나 위탁사업형의 생존기간이 다소 짧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익증진형을 제외하고 모든 조직유형들의 연도별 폐업발생위험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

으며, 특히 4년차에 접어들 경우 취약계층고용형을 제외한 모든 조직유형들이 급격한 폐업발생위험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위탁사업형은 4년차 폐업발생위험률이 37%로서 가장 높은 위험률을 나타내었다.

〈표 10〉 조직유형별 폐업 발생위험 생명표분석

	구간	구간 입력수	위험 노출수	종료 사건수	종료 비율	생존 비율	누적 생존 비율	확률 밀도	위험률
지역 사업형	0	208	208	0	.00	1.00	1.00	.000	.00
	1	208	208	9	.04	.96	.96	.043	.04
	2	199	199	20	.10	.90	.86	.096	.11
	3	179	179	17	.09	.91	.78	.082	.10
	4	162	162	38	.23	.77	.60	.183	.27
	5	124	62	0	.00	1.00	.60	.000	.00
사회 서비스형	0	80	80	0	.00	1.00	1.00	.000	.00
	1	80	80	3	.04	.96	.96	.037	.04
	2	77	77	6	.08	.92	.89	.075	.08
	3	71	71	9	.13	.87	.77	.113	.14
	4	62	62	10	.16	.84	.65	.125	.18
	5	52	26	0	.00	1.00	.65	.000	.00
위탁 사업형	0	73	73	0	.00	1.00	1.00	.000	.00
	1	73	73	5	.07	.93	.93	.068	.07
	2	68	68	10	.15	.85	.79	.137	.16
	3	58	58	10	.17	.83	.66	.137	.19
	4	48	48	15	.31	.69	.45	.205	.37
	5	33	16	0	.00	1.00	.45	.000	.00
취약계층 고용형	0	98	98	0	.00	1.00	1.00	.000	.00
	1	98	98	7	.07	.93	.93	.071	.07
	2	91	91	8	.09	.91	.85	.082	.09
	3	83	83	13	.16	.84	.71	.133	.17
	4	70	70	10	.14	.86	.61	.102	.15
	5	60	30	0	.00	1.00	.61	.000	.00
공익 증진형	0	51	51	0	.00	1.00	1.00	.000	.00
	1	51	51	3	.06	.94	.94	.059	.06
	2	48	48	8	.17	.83	.78	.157	.18
	3	40	40	3	.08	.93	.73	.059	.08
	4	37	37	10	.27	.73	.53	.196	.31
	5	27	13	0	.00	1.00	.53	.0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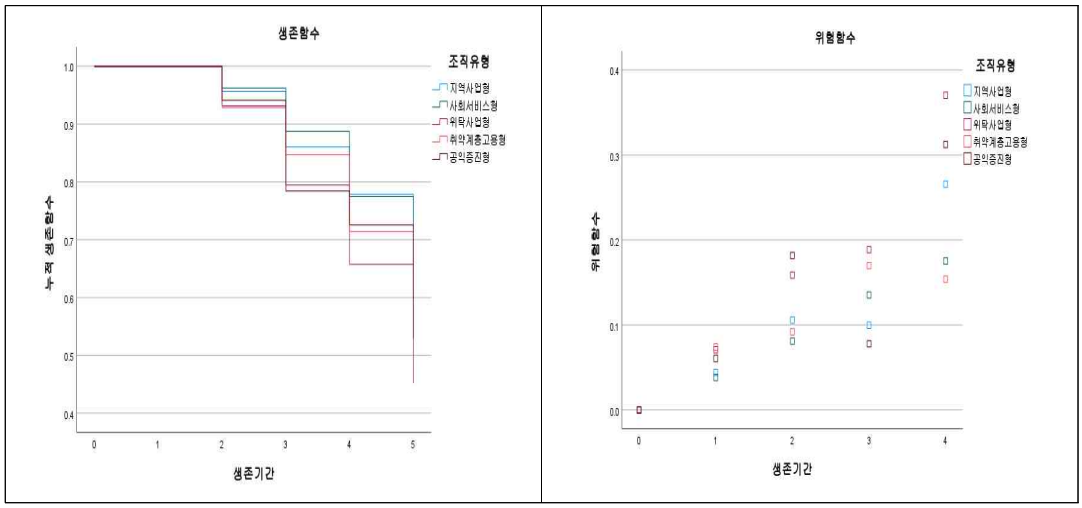
평균 생존 중위 기간: 5년(지역사업형, 사회서비스형, 취약계층고용형, 공익증진형), 4.7년(위탁사업형)

Wilcoxon(Gehan)통계량: 7.390 , 자유도 4 , 유의확률 0.117

〈그림 4〉는 조직유형별 생존함수와 위험함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조직유형별 생존함수와 위험함수

(생존기간 단위: 년)



3. 콕스(Cox) 회귀분석결과

사회적협동조합 생존기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생존분석의 콕스(Cox)-비례위험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본 연구의 콕스회귀모델의 모델적합도는 우도비통계량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일반적으로 -2로그우도(Log-likelihood)는 추정된 모델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적합시키는지의 척도로 사용된다. 잘 적합된 모델일수록 관측값의 우도는 증가하며 우도값이 증가할수록 -2LL값은 작아진다. 즉 잘 적합된 모델일수록 -2LL값은 작아진다(곽기영, 2019:468). 본 연구에서 모델의 적합도 검정결과 -2로그우도는 2222.704, 카이제곱은 262.041, 유의확률은 0.000으로서 모델의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20]

〈표 1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생존기간에는 정부지원, 총회 및 이사회 개최빈도, 지역사회기여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지원을 받다가 중단되는 조합은 위험비가 10.653이다. 이는 정부지원을 받다가 중단되는 조합은 지속적으로 정부지원을 받는 조합(기준범주)보다 폐업의 발생위험이 10.653배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21]

그리고 총회개최의 경우 위험비는 0.579이다. 이는 총회개최 횟수가 한 단위 증가할수록 폐업 발생위험률은 42.1%(=(1-0.579)×100)만큼 감소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사회개최의 경우도 위험비

20) 콕스회귀모델을 추정한 이후 LML함수(log minus log function)를 이용하여 비례위험가정 충족여부를 확인하였다. LML함수곡선에서 비교하려는 집단들의 곡선이 교차하거나 서로 만나지 않고 관측기간동안 평행을 유지하면 비례위험가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곽기영, 2019:473). 본연구에서 정부지원유형 3개 집단과 조직유형 5개 집단의 LML함수곡선이 대체로 만나거나 교차하지 않으며 평행한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집단간 위험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21) 범주형변수의 경우 기준범주 대비 각 범주가 폐업이 발생할 상대적 위험도를 의미하며, 연속변수인 경우 독립변수의 단위량변화에 따른 위험도의 퍼센트 변화량으로 계산할 수 있다(배화옥, 2007:403).

는 0.978로서 이사회개최 횟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폐업 발생위험률이 2.2%(=(1-0.978)×100) 만큼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사회 기여의 횟수도 위험비가 0.996으로서 지역사회 기여의 횟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폐업 발생위험률이 0.4% (=(1-0.996)×100)만큼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표 11〉 사회적협동조합 생존기간의 영향요인 분석

구분		B	표준오차	Wald	자유도	유의확률	Exp(B)
조직 요인	조직규모 (조합원수)	-.001	.000	1.441	1	.230	.999
	조직유형(1) 지역사업형	.088	.240	.133	1	.715	1.092
	조직유형(2) 사회서비스형	.058	.282	.042	1	.837	1.060
	조직유형(3) 위탁사업형	-.026	.263	.010	1	.921	.974
	조직유형(4) 취약계층고용형	.136	.267	.259	1	.611	1.146
재정 요인	자본금	.000	.000	.526	1	.468	1.000
	출자금	.000	.000	.100	1	.752	1.000
	매출액	.000	.000	.165	1	.685	1.000
정부 정책 요인	정부지원유형(1) 지원전혀없는조합	1.871	1.013	3.409	1	.065	6.492
	정부지원유형(2) 지원중단조합	2.366	1.015	5.428	1	.020*	10.653
	공공기관 우선구매액	.000	.000	.007	1	.933	1.000
사회적가치 요인	취약계층고용수	.000	.000	3.006	1	.083	1.000
	지역사회기여도	-.004	.002	4.287	1	.038*	.996
네트 워크 요인	이사회개최	-.023	.009	5.851	1	.016*	.978
	총회개최	-.546	.043	160.777	1	.000***	.579
-2 Log-likelihood=2,225.098, 카이제곱=261.160, 모형 유의확률=0.000***							

*p<.05, **p<.01, ***p<.001

주: 1) 범주형변수에서 정부지원유형에서 기준범주는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은 조합이며, 조직유형에서 기준범주는 공익증진형임.

2) 위험비(Exp(B))는 상대적 위험도를 의미하며,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공변수의 영향의 정도를 말함. Exp(B)가 1보다 크면 회귀계수(B)는 positive value(+)이고 위험률비는 증가하며, 1보다 작으면 회귀계수(B)는 negative value(-)로 나오며 위험률비는 감소함(송경일·안재억, 2006; 김학린, 2016).

3) Wald 통계량은 모형에서 생존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공헌도를 의미하고 통계량이 클수록 요인의 공헌도가 큼.

4. 분석결과 논의

콕스 회귀분석의 결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생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조

직의 특성 및 재정적인 요인보다는 정부정책요인(정부지원의 유형)과 사회적가치추구요인(지역사회기여도), 네트워크 요인(이사회 및 총회개최 횟수) 등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의 채택 및 기각 여부를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의 규모와 조직의 유형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생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은 기각되었다.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의 성과가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결과(유두호·황정윤, 2018)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규모를 나타내는 조합원수가 많아도 이것이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회귀분석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조합원수의 회귀계수가 부(-)의 방향을 나타내어 조합원수가 많을수록 폐업발생의 위험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2020년도의 510개 전체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수를 조사한 결과(〈표 6〉)에서도 폐업한 조합의 조합원수는 평균 59명으로 전체평균 163명보다 낮았지만 생존조합은 238명으로서 전체평균보다 높았다. 조직의 유형도 생존기간에 유의미한 결과를 주지 못하였지만, 위탁사업형의 경우 다른 조직유형보다 평균생존기간이 4.7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았다. 그리고 거의 대체적으로 모든 조직유형에서 연차가 증가할수록 폐업발생위험이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4년차에 접어들 경우 폐업발생위험이 가장 높게 나타나 조직의 운영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재정요인(자본금, 출자금, 매출액)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생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2도 기각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협동조합의 자본금, 출자금이 조직의 성과에 정(+)의 영향을 주지만(김세운 외, 2019; 장승권 외, 2018) 본 연구의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생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이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과 달리 주된 사업이 공익사업을 40%이상 수행해야 하는 조직설립의 특성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정부지원금과 공공기관우선구매액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생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3은 부분채택되었다. 즉, 정부지원금이 조합의 생존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22] 이러한 결과는 정부지원이 높을수록 사회적기업의 생존율이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이영수 외, 2017)와 일치한다. 특히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은 조합은 5년간 총 43개 조합 중 4년차에 1개의 조합만 폐업이 발생하였으며, 거의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23] 또한, 정부지원이 중단되는 조합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는 조합보다 폐업발생위험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표 11〉 참조), 사회적협동조합이 정부지원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책수단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24] 특히 위탁사업의 경우 정부위탁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2) 실례로 사회적경제조직인 경기도형 온맘터치 협동조합의 경우 초기생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 중 초기재원확보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출자금과 가맹보증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경기도가 지원하는 사업공모에 지원하여 3년간 매년 약1억원의 지원금을 확보하여 사업초기 재정운영에 큰 도움을 받았고, 이후 임팩트 투자유치도 성공적으로 진행된 바 있다(홍현민, 2021: 324).

23) 본 연구에서 5년간(2016-2020년)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은 조합의 경우 5년간 평균액은 2억 868만원이었으며, 지원이 중단된 조합의 평균액은 4287만원으로 조사되었다.

24)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기업에 비해 지원혜택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회적기업은 창업후 4년간 소득세, 법인세 50%감면, 사업비 및 인건비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의 혜택 외에 별도의 혜택이 없다(김기태 외, 2018:42). 물론 정부보조금 및 지원금을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 없이는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장승권 외, 2018:49). 한편, 공공기관우선구매액은 생존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통한 혜택을 가장 선호한다는 현장조사결과(국회입법조사처, 2014:42)와 큰 차이를 보인다.

넷째, 취약계층고용과 지역사회 기여실적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생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4는 부분채택되었다. 취약계층고용이 협동조합의 경제적 성과를 높이며(장승권 외, 2018), 사회적기업의 인증유지확률 높인다는(이영수 외, 2017)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취약계층고용인원이 많아도 생존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폐업한 조합의 취약계층고용인원은 평균이 265명인 반면, 생존조합의 고용인원은 7명에 불과하여 큰 차이를 보였다(〈표 6〉 참조). 이는 단순한 취약계층 고용인원수의 증가보다 조합경영에서 총회 및 이사회의 정상적 운영이 생존에 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반면, 매우 미미한 영향력이지만 지역사회기여실적이 많을수록 폐업발생위험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협동조합의 지역사회의 생산활동증가로 조직의 성과를 높인다는 선행연구(강민수, 2016; 임욱빈 외 2016)와 유사한 맥락이다. 실제 협동조합은 물품기부, 현금기부, 공간제공, 교육, 자원봉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협동조합 연대사업에 참여하여 공동체 기여활동을 하고 있다(장승권 외 2018:72). 따라서 향후 협동조합연합회나 지역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경제 연대조직 등에 가입하여 연대활동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 기여활동의 국내성공사례로서 1990년대 중반 설립운영 중인 지역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안성, 인천, 안산, 원주, 대전민들레등)이 있다(장승권 외, 2018:73). 조합원들의 건강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꾸준히 보건예방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여는 협동조합 본연의 정체성 확립뿐 아니라 감염병예방 등 보건의료분야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민들을 돌봄으로 실질적 지역복지 등을 제공할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를 살펴보면, 프랑스의 공익협동조합과 캐나다 퀘벡의 연대협동조합이 자연생태계의 유지와 조성, 쓰레기의 재활용 및 관리, 지역예술의 복원과 창조, 공연·방송·공정여행 등 문화와 여가활동, 지역의 각종 장인활동 및 도시농업 등의 분야에서 많이 설립되어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영국은 커뮤니티카페, 커뮤니티학교 등의 형태로 마을재생과 활력을 목적으로 커뮤니티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에는 유럽 7개 국가에서 12개 재생에너지협동조합이 유럽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연합회를 구성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장종익, 2015:14-15).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요인(총회 및 이사회개최 횟수)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생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5는 전부채택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네트워크요인이 협동조합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복태 외, 2016; 신명호·이아름, 2013; 유두호·엄영호, 2020)와도 일치된다. 총회개최횟수의 경우 협동조합의 생존에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한 단위 증가할 때

받는 것이 협동조합의 자율성, 독립성을 저해할 수도 있지만, 한국의 경우 수많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정부지원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장승권 외, 2018:48). 따라서 협동조합 특성에 맞는 현장지원체계를 개발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사업을 연계하거나 지역기금조성사업방안 등이 필요하다(이로운넷, 2021.05.31).

폐업발생위험이 42%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운영과 생존에서 조합원들의 경영과 의사결정참여를 보장하는 총회개최의 안정적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25] 이를 위해서 각 사회적협동조합은 총회운영의 원활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총회운영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26] 안건 및 결산검토와 관련해서는 운영지원의 전문기관의 도움과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19와 같은 비상상황발생 시 정상적인 총회개최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서면의결 또는 전자의결방식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현황 및 활동파악, 목표와 비전공유를 위해서 조합원에 대한 협동조합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icoop 협동조합지원센터, 2015).

협동조합의 이사회는 경영자 감시기능, 경영자에게 조언과 충고를 하는 서비스기능, 다른 조직과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생존을 위해 자원동원 기능 등을 수행한다(박성순 외, 2020:94). 또한, 이사회가 강한 유대관계로 연결되어 정보를 공유하며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 집단결속력과 상호신뢰[27]가 증가한다(Littunen, 2000; 박성순 외, 2020:95). 즉 이사회는 구성원을 대리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구성원과의 조직계획과 비전에 대한 소통과 합의를 통하여 조직의 생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협동조합 이사회의 중요한 일이 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뢰를 형성하여 유대를 강화시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조합원들이 조합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주인으로서 책임있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성순, 2020:92).

본 연구결과에서 폐업한 조합의 이사회개최 횟수는 5년간 7회뿐이었으며, 생존한 조합은 18회로 2배 이상(전체평균은 14회)이었다(〈표 6〉 참조). 즉, 생존조합은 연간 3-4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분기별로 정기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원활한 운영과 생존을 위해서 매년 분기별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조직내부 의결기구로서의 민주적 통제기능을 안정화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28] 실례로 국내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록하고 가장 많은 회원조합을 보유하고 있는 아이쿱 지역생활협동조합의 경우 생협이사들

25) 협동조합의 총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으며, 정기총회는 협동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시 소집이 가능하다. 총회의 의결사항은 협동조합기본법 상에서 정관의 변경,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보고서 승인 등 10가지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26) 실제 원활한 총회운영을 위해서 2개월전 총회일정수립→1개월전 총회안건검토→20일전 추가안건 및 결산검토→10일전 총회 안건확정→7일전 총회준비→총회이후 후속조치를 취하는 등 구체적인 일정표에 따라서 사전일정 점검이 중요하며, 조합원 간 갈등발생 시 파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시 외부 전문가와의 소통, 자문, 협력체계구축 등도 매우 중요하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2:45-61).

27) 협동조합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상호복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조직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생산성은 참여구성원 간의 높은 수준의 신뢰, 협력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Vladislav, V, 2004; 홍현민, 2021:329).

28) 물론 이사회개최 횟수가 민주적 통제의 성숙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은 아닐 수 있고, 각 협동조합의 조직운영과 경제적 비용 등에 따라 적정 횟수가 있을 수 있다. 즉, 각 협동조합의 역사와 문화에 따라서 형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장승권 외, 2018:47).

이 서로 간의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민주적인 조직운영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성순 외, 2020:105). 또한, 아이쿱생협은 한달에 1~2회 정기적인 이사회를 가지며 모든 회의록은 지역조합의 사무실에 항상 비치하고 연간 2회의 정기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회의내용과 회의록 개방에 늘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이사회와 총회의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운영방법과 조합원들과의 실질적인 소통을 위해서 매달 정기적인 이사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생존과 조직 구성원간 협력관계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이사회와 조합원 간의 참여와 소통강화를 위해 경영진과 이사회에 노동안전, 기업윤리, 경영원칙 등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도록 사회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홍현민, 2021:333),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국내 사회적협동조합에서도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모색하는데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자료를 활용하여 2016년에 설립·인가되어 2020년까지 운영된 전국의 510개 사회적협동조합의 생존율 및 생존기간의 차이를 분석하고, 주요 생존요인들을 파악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활성화 및 생존율 증대방안들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생존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자본금, 매출액, 총회 및 이사회개최횟수, 지역사회기여횟수, 조합원수, 출자금, 자산, 정부지권금 등의 변수의 평균값이 폐업한 조합의 평균값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공공기관 우선구매액과 취약계층 고용인원 수의 변수만이 폐업한 조합의 평균값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둘째, 생명표분석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의 사회적협동조합의 생존율은 58%이었으며, 1년차 폐업발생위험이 5.3%(27개), 2년차 10.2%(52개), 3년차 10.2%(52개), 4년차 16.3%(83개)로서 4년차에 폐업발생위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차가 증가할수록 폐업발생위험률이 증가하였다. 셋째, 정부지원유형별 생존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받는 조합은 4년차에 1건 폐업을 제외하고 모두 생존하였으며, 정부지원이 없거나 중단된 조합은 모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률이 증가하였고, 정부지원이 중단된 조합의 경우 4년차 폐업발생위험률이 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4년차에 접어들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조직의 운영에서 전반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 넷째, 조직유형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위탁사업형의 생존기간이 4.7년으로 다소 짧았으며, 4년차 폐업발생률이 37%로서 가장 높은 위험률을 보였다. 또한 공익증진형을 제외한 모든 조직에서 연도별 폐업발생위험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다섯째, 콕스회귀분석결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생존기간에는 정부지원금, 총회 및 이사회의 개최빈도, 지역사회기여도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이 중단된 사회적협동조합은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받는 조합보다 폐업발생위험이 10배 이상으로 높았으며, 총회개최의

경우 한 단위 증가할수록 폐업발생위험률은 42%만큼 감소하고, 이사회개최횟수는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폐업발생위험률이 2.2%만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생존은 조직요인과 재정적 요인보다는 정부정책요인(정부지원), 사회적가치추구요인(지역사회기여도), 네트워크요인(총회 및 이사회개최) 등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협동조합이 설립된 조직유형에 따라 생존차이는 없으며 영리기업과 같이 매출액이 생존의 절대요인이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존재목적처럼 다양한 정부지원의 토대위에서 공익을 추구하는 지역사회기여실적을 높이고 총회 및 이사회와 같은 조합내부구성원간의 지속적인 참여와 소통, 협력이 생존의 중요한 요인이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따라 공익과 사회적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며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총회 및 이사회의 역할 강화방안을 찾고, 협동조합특성에 맞는 현장지원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동조합 자체적으로도 지역사회기여를 높이기 위해서 물품기부, 현금기부, 교육 및 자원봉사 등을 통해서 공동체기여활동을 활발하게 해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지역협동조합연합회나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연대강화도 필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생존에 가장 큰 공헌도를 보이는 총회개최의 양적, 질적 강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주기적인 총회개최가 중요하고, 총회준비위원회 설치 및 교육, 운영지원에서 외부전문기관의 소통, 자문 등이 매우 필요하다. 또한 이사회가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개최하고, 조직내부의 의결기구로서 민주적 통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한 기여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사회적협동조합 전체를 대상으로 생존분석을 처음으로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정부지원별, 조직유형별로 구분하여 생존율 차이를 비교분석하였고, 주요한 생존요인을 도출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생존요인으로 조직의 특성과 재무요인보다는 사회적가치추구요인, 정부정책적 요인, 네트워크요인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도출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넷째, 기존연구들은 주로 횡단면적 연구들로서 종단면적인 그리고 시간적인 면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반면 본 연구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휴·폐업의 발생이 언제 나타나는지, 연도별 시간의 경과에 따른 휴폐업의 발생위험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향후 위험예측 및 대응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사회적협동조합의 폐업여부에서 경영공시참여가 의무이행사항이지만 경영공시자료가 없는 사업체를 폐업으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매출액과 상용근로자가 없는 상태가 1년 이상인 기업을 소멸기업으로 보는 통계청분류를 참고하여 경영공시자료가 없거나 매출액과 상용근로자가 1년 이상 없는 사업체의 경우 5년간의 추적조사를 통하여 폐업으로 간주하였다. 다만 차후 연구에서 각 사업체의 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국세청 및 관할세무서 폐업신고여부를 확인하여 보다 정확한 폐업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개최나 빈도수를 네트워크의 활성화정도로 측정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구성원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 협력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회의내용에 대한 질적인 분석과 함께 이사회의 의사결정의 민주성,

정부공개의 투명성, 이사로서의 책임감 등의 네트워크의 질적 요소에 대한 추가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의 분석기간(2016~2020년)에 2020년이 포함되어 있다.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시기여서 사회경제적으로 위축되고 타격을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 전 세계적 위기상황 속에서 지자체(수원시)와 사회적경제연합회가 방역소독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추진한 사례도 있지만(www.lifein.news, 2020.02.05.), 방역조치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행사가 취소되거나 매출액 감소, 사업중단, 지원대출취소 등 다양한 사례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http://ecosophialab.com, 2020.06.10).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을 조합의 생존요인으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차후연구에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생존율비교 및 요인분석 등이 필요하다.

넷째, 공공기관 우선구매액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해당 지역의 전체액수를 사용하였다. 향후 연구에서 개별조합의 설문 및 면담조사를 통하여 실제 구매액의 정확한 액수를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자료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역별, 업종별 생존기간의 차이를 비교분석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생존기간 차이를 비교하며 생존의 주요 변인을 분석하고 향후 생존율 증대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 주요 변인별 추정값이 조사된다면 개별 사회적협동조합의 생존율 예측 및 생존모형 등을 개발하는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민수. (2016). “협동조합 연구현황과 향후과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기태·박건영·정지영·이건희. (2018). “사회적경제 시도별 특화방안 연구”. 한국협동 조합연구소

김권식·이광훈. (2014). “공공연구조직의 자원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 탐색-자원기반이 론의 적용”. 「한국행정연구」, 23(2):113-142

김석준·이선우·문병기·곽진영. (2000). “뉴거버넌스 연구”. 서울:대영문화사.

김준기·이민호. (2006). “한국의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관의 네트워크와 조직효과성”. 「한국행정연구소」, 44(1).

김민창·김재환·정도영. (2018). “협동조합 기본법의 입법영향분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제34호.

김복태·이계만·박범준. (2016). “사회적경제조직의 네트워크 역량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의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2016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김복태·김대진. (2015).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측정지표 개발 및 중요도 분석”. 「한국행 정학보」, 49(3):303-331

김복태·이계만·박범준. (2018). “협동조합 네트워크 다양성이 조직의 경제적 성과에 미 치는 영향 연구: 수도권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5(1): 183-209.

김진영·정석호. (2020).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주요 추진 과제 Pool 선정: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자체연구보고서.

김세운·정현·서인석. (2019). “협동조합의 조직성과와 영향요인, 그리고 유형의 조절효과: 협동조합 경영공시자료를 활용하여”.「지방행정연구」, 33(2): 181-208.

김우영. (2017). “사회적기업의 생존과 성장: 충남을 대상으로”.「지역개발연구」, 49(2):121-150.

김용태. (2012). “사회적 기업의 창업성과 영향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정부지원정책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태훈. (2009). “중소건설업체의 생존분석에 관한 실증연구: 기술보증기금의 지원을 받은 기업을 중심으로”.「국토연구」, 61:255-273.

김학린. (2016). “생존분석을 이용한 공공시설 입지갈등의 장기화 요인분석”.「정책분석 평가학회보」, 26(1): 161-187.

길현종·김성근·류성민·이경희·안승재. (2014). “2013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고용노동부

곽기영. (2019). “SPSS를 이용한 통계데이터분석”. 서울:청람.

남기정·이동명. (2018). “청년창업기업(20-30대)의 생존특성에 관한 실증연구”.「벤처창 업연구」, 13(5):63-72.

두성림·장석인·진재근·이남겸. (2020). “해외 사회적협동조합 사례연구: 이탈리아, 캐 나다 및 프랑스”.「산업진흥연구」, 5(1):137-147.

두성림·장석인·배성필·최호규. (2020).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성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산업진흥연구」, 5(1): 35-45.

류기형·류영미·박병현. (2009).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연구”.「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11(3).

박강민·김준연. (2018). “기업의 생존요인 연구: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을 중심으로”.「기술혁신연구」, 26:(4): 98-121.

박성순·이상윤·서진선. (2020).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회의 유대강도가 조직의 성과 에 미치는 영향”.「유통경영학회지」, 23(5):91-108.

박성훈·김창범. (2017). “SBM 초효율성 분석을 이용한 취약계층 고용형 한국 사회적협 동조 합의 사회경제적 성과분석: 지역별과 업종별”.「산업경제연구」, 30(5): 1665-1682.

송경일·최종수. (2008). “SPSS 15를 이용한 생존자료분석”. 아카데미시리즈.

송경일·안재억. (2016). “SPSS for window를 이용한 생존분석”. 도서출판 한나래.

서지영·이윤준·조규진. (2014). “연구개발분야 사회적협동조합 육성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설광언·김동석. (2012). “협동조합기본법이 경제에 미칠 영향”. KDI보고서.

성길용. (2019). “외국인투자기업 생존율 및 영향요인”.「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5):287-295.

신명호·이아름. (2013). “원주지역 협동조합의 생성과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본 네트워크의 효용”.「정신문화연구」, 36(4): 32-57.

신창환. (2015). “사회적 경제의 실천 조건과 정책을 통해 본 사회적 협동조합의 과제”.「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8(2):91-119.

장종익. (2015). “세계 협동조합의 동향”.「세계농업」, 제183호: 1-18.

장종익. (2017).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의 특성과 정책적 함의”. 「한국협 동조합연구」, 35(2): 81-101.

장승권·강장석·최은주·장지연. (2018). “협동조합의 실태분석과 정책과제. 한국의회학회.

장연진. (2010). “여성복지조직의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네트워크 중심성과 조직효과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연구회」, 41(4)

장현주. (2013). “조직생태학적 관점을 통한 사회적기업 생태계 탐색”. 「한국공공관리학보」, 27(4): 165-190.

전광현. (2004). “지역사회복지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 회복지학회」, 14

전형수. (2013). “외국의 입법례에서 본 사회적협동조합 관련법의 문제점”. 「한국협동조 합연구」, 31(3): 1-47.

정규호. (2013). “도시공동체운동과 협동조합 지역사회만들기”. 「정신문화연구」, 36(4): 7-36.

정도영·조주현·서경택. (2014). “협동조합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현장조사보고서 제30호.

정순문. (2019).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향 제안”. 「공익과 인권」, 통권 19권: 233-288.

조상미·김진숙. (2014). “한국의 사회적기업 정책네트워크 특징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41(4):283-323.

염찬희. (2015). “한국 협동조합 연구경향분석: 1983년~2014년의 한국협동조합연구 게재논 문을 중심으로”. 「한국협동조합연구」, 33(3): 91-108.

양세진. (2011). “한국 사회적 기업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사례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유두호·엄영호. (2020).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적가치창출 영향요인분석: 조직 내부요인 과 지방정부 역량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10(3): 59-92.

유두호·황정윤. (2018). “사회적협동조합 성과의 영향요인 분석: 자원기반이론을 중심으로”. 2018년도 한국지방정부학회 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765-780.

유한나·민동권. (2015). “사회적기업의 창업을 위한 자원 확보전략에 관한 연구”. 「고객만 족경영연구」, 17(3):165-190.

유한나·한상일. (2021). “사회적경제 조직의 부문 간 협력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지역 특성별 차이 규명”. 「한국협동조합연구」, 39(3):1-29.

이근우·강만수·박상규. (2015). “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분석에 관한 연구: 강원신용보 증재단이 지원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연구」, 37(1): 57-75.

이영수·길현종·김영미·류성민·정선영·안승재. (2017). “2016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진흥원.

이영리·신명호·홍세희. (2015). “생존분석을 적용한 장애인 자영업자 이탈 및 영향요인 분석 ”. 「조사연구」, 16(3):25-44.

이재희. (2015). “사회적기업간 네트워크 특성과 조직성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이희완(2013), “우리나라 사회적 협동조합의 제도적 특성과 과제”. 제도와 경제, 7(2):205-225.

임욱빈·신용준·안상봉. (2016).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의 역사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경영사연구」, 31(4): 119-139.
배화옥. (2007). "아동학대 유형별 재발생 특성과 관련요인에 대한 생존분석". 「아동권리 연구」, 11(3): 389-411.
송경일·안재억. (2006). "SPSS를 이용한 생존분석". 서울: 한나래.
조상미·김진숙. (2014). "한국의 사회적기업 정책네트워크 특징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41(4): 283-323
최유진. (2017) "사회적경제증진 조례의 협동조합 활성화 효과: 공간회귀모형의 활용". 「지방행정연구」, 31(2): 299-32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2).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A부터 Z까지:정관의 이해".
홍성로·남기정·정낙원.(2006). "보증기업 생존분석 실증연구".KORDET REPORT. 2006-1.
홍현민·강철희·이문석. (2021). "사회적경제조직의 초기 생존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사례에 대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3(2):305-339.

Alter, C. and Hage, J. (1993). "Organizations working together". *Newbury Park, CA:Sage Publication.*
Barbara S., Magnanelli, E. R. and Agnese S. (2015). "Key Factors for Success of Social Enterprises in Italy: Analysis of Financial and Operating Performance". *Review of Economics & Finance*, 6: 43-60.
Barney, J. B. (1991). "Firm Resources and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Journal of Management,* 17(1): 99-120.
Barney, J. B., Wright, M., & Ketchen Jr., D. J. (2001). "The resource-based view of the firm: Ten years after 1991" *Journal of Management,* 27: 625-641.
Baron, Robert A; Markman, Gideon D. (2000). "Beyond social capital: How social skills can enhance entrepreneurs' success"*The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Briarcliff Manor,* 14(1): 106-116.
Birchall, J. (1997).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Movement".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_____. (2013). "The potential of co-operatives during the current recession". *Journal of Entrepreneurial and Organizational Diversity*, 2(1), 1-22.
Bond, J. (2009), "Co-operative Financial Performance and Board of Director Characteristic: A Quantitative Investigation", *Journal of Co-operatives*, 22: 22-44
Bontis, N., Ciambotti, M., Palazzi, F., & Sgro, F. (2018). "Intellectual capital and financial performance in social cooperative enterprises".*Journal of Intellectual Capital*, 19(4): 712-731.
Bryson, John M., Fran Ackermann, & Colin Eden. (2007). "Putting the Resource-Based View of Strategy and Distinctive Competencies to Work in Public Organization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7 (4): 702-17.
Chrislip, David. D and Carl, E, Larson. (1994). "Collaborative Leadership". San Francisco:

Jossey-Bass.

Dacin, P. A., Dacin M. T. & Matear, M. (2010), "Social entrepreneurship: why we don't need a new theory and how we move forward from here," *Academy of Management Perspectives,* 24(3): 37-57.

Davern, M. (1997). "Social Networks and Economic Sociology: A Proposed Research Agenda for a More Complete Social Science". *The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56(3): 287-302.

David, A. H., L. B. Debra and A. Vanessa. (2010), "Women on Board: Not Just the Right Thing, But the Bright Thing", Paper for The Conference Board of Canada.

Defourny, J. & Nyssens, M. (2008). "Social enterprise in Europe". *Social Enterprise Journal*, 4(3), 202-228.

Ensley, M. D., K. M. Hmieleski, and C.L. Pearce. (2006). "The importance of vertical and shared leadership within new venture top management teams: Implications for the performance of startups". *The Leadership Quarterly,* 17(3): 217-231.

Goldman, S., & Kahnweiler, W. M. (2000). "A collaborator profile for executives of nonprofit organizations". *Nonprofit Management and Leadership*, 10(4):435-450.

Gulati, Nitin Nohria & Akbar Zaheer. (2000). "Strategic Network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1(3): 203-21.

Hannan, M.T., and J.Freeman. (1977). "The Population Ecology of Organizations". *American Journal of Sciology,* 82(5): 929-964.

Hansmann, H. (1999). "Cooperative firms in theory and practice". LTA, 48(4): 387-403.

Littunen, H. (2000). "Networks and Local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in the Survival of New Firms". *Small Business Economics*, 15:59-71.

Lopez-Arceiz, F. J., Bellostas, A. J., and Rivera-Torres, M. P. (2017). "The Slaughtered and the Survivors: Collaboration Between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as a Key to Success in Times of Financial Crisis".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28(4): 1622-1647.

Mair, Johanna. & Seelos, Christian. (2005).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Profit". European Business Forum, 20: 49-53.

Majee, W. and Hoyt, A. (2011). "Cooperatives and Community Development: A Perspective on the Use of Cooperatives in Development." *Journal of Community Practice*, 19:48-61.

Menzani, T and V. Zamagni. (2010). "Cooperative Networks in the Italian Economy". *Enterprise & Society,* 11(2): 98-127.

Meyer, John W., John Boli, George M. Thomas, and Francisco O. Ramirez. (1997). "World Society and the Nation-Stat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3: 144-81.

Meyskens, M., Carsrud, A. L. & Cardozo, R. N. (2010). "The symbiosis of entities in the social engagement network: the role of social ventures,"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22(5): 425-455.

Nader H., Robert E. and McNulty. (2017). "Contributions and challenges in the struggle to end poverty: the case of Kiva". *Information Technology For Development*, 23: 367-387.

Wernerfelt, B. (1984). "A Resource-Based View of the Firm."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5: 171-180.

O'Toole, Laurence J., & Kenneth J, Meier. (1999). "Modeling the Impact of Public Management: Implications of Structural Context",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9(4): 505-26.

Peters, B. Guy. & Pierre, John. (1998). "Governance Without Government? Rethinking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8(2): 223-243.

Provan, Keith G, & H. Brinton M. (1995). "A Preliminary Theory of Interorganizational Network Effectiveness: A Comparative Study of Four Community Mental Health System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0: 1-33.

Ridley-Duff, R. (2009). "Cooperative social enterprises: Company rules, access to finance and management practice". *Social Enterprise Journal,* 5(1):50-68.

Rodolfo. Vazauez., Maria, Leticia S., & Luis, Ignacio A. (2001) "Market Orientation, Innovation and Competitive Strategies in Industrial Firms". *Journal of Strategic Marketing,* 9(1): 69-90.

Roelants, B., Dovgan, D., Eum, H., & Terrasi, E. (2012). "The Resilience of the Cooperative Model". Brussels: CECOP-CICOPA Europe.

Uzzi, B.(1997). "Social Structure and Competition in Interfirm Networks: The Paradox of Embeddednes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2: 35-67.

Waserman, S., Faust, K. (1994).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Wernerfelt, B. (1984). "A Resource-Based View of the Firm."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5(2): 171-180.

Zeuli, K. and Radel, J. (2005). "Cooperative as a Community Development Strategy: Linking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Regional Analysis and Policy*, 35(1):43-54.

기획재정부. 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2020.03.31.

기획재정부. 제5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2022.3.30.

기획재정부. 2021년 협동조합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2021.12.

고양신문.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모델이 협동조합의 살길". 2020.11.23.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실적 및 계획 2013년~2021년.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총 3,000개소 달성". 2021.09.08.

국제신문. "부산형 협동조합 길찾기: 지역협동조합 실태". 2021.01.18.

라이프인. "신종 코로나 확산에 사회적경제 진영 빨간불, 행사 잇단 취소·연기". 2020.02.05.

메트로신문. "서울시, 몸집불었지만 운영률 낮은 협동조합 성장기반 다진다". 2020.12.30.

생태적지혜연구소협동조합. “코로나19와 사회적경제”. http://ecosophialab.com. 2020.06.10
아이쿱 협동조합지원센터. “협동조합 총회준비 실전교육”. 2015
이로운 넷. “코로나19 이후 협동조합에게 주어진 과제는?”. 2020.05.09.
이로운 넷. “춘천시 협동조합 생존율, 일반 51.8%, 사회적 95%”. 2021.05.31.
이로운 넷. “협동조합, 양적성장으로 조합원 50만명, 영세성은 숙제로 남아”. 2022.04.08.
세이프 넷. “협동조합의 생존율에 관한 보고서”. http://sapenet.net.
한겨레신문. “협동조합 가치, 위기 때 더 빛나: 코로나 해법도 연대·협력에서 찾자”. 2020.04.20.
한겨레신문. “협동조합 생존율 결코 낮지 않아”. 2018.03.22.
협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coop.go.kr.

최희성(崔熙聲): 경상국립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논문: 지방의회 신뢰의 유형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2016), 현재 경상국립대학교 행정학과 강사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책분석 및 평가, 사회적협동조합, 시차이론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 “정책결정과 정책집행 간의 시차에 관한 연구”(2018), “역대 정부의 법률과 시행령 간의 시차분석”(2020), 등이 있다.(over7511@naver.com)

민병익(閔丙翼): 경상국립대학교와 미국 Auburn University에서 각각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경상국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공공정책분석, 정부예산론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지방의회의 인적 구성에 따른 조례의 특성”(2018), “변혁적, 윤리적 리더십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연구”(2019), “기초지방의회 조례안 처리의 소요시간”(2021) 등이 있다.(min@gnu.ac.kr)

〈**논문접수일**: 2022. 9. 1 / **심사개시일**: 2022. 9. 20 / **심사완료일**: 2022. 10. 28〉

Abstract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Survival of Social Cooperatives Using Survival Analysis

Choi, Hui-Seong
Min, Byoung-I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urvival rate and period of survival of social cooperatives using survival analysis techniques, an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survival.

Management disclosure data(2016-2020) of 510 social cooperatives across the country was used for analysis, and five factors such as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financial factors, government policy factors, social value factors, and network factors were used as factors influencing survival.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follows. First, in the life table analysis, the survival rate of social cooperatives for 5 years was 58%, and the risk of business closure in the first year was 5.3%, the second year 10.2%, the third year 10.2%, the fourth year 16.3%. As the years increased, the risk of co-operative closure increased.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urvival rate by type of government support, and the risk increased over time in all cooperatives that had no government support or stopped receiving government support. In the case of cooperatives whose government support was stopped, the risk of business closure in the fourth year was the highest at 32%. Thir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organization type, but the survival period of the consignment project type was rather short at 4.7 years, and the 4th year business closure rate was the highest at 37%, and the risk of business closure by year showed an overall increasing trend in all organizations. Fourth, as a result of Cox regression analysis, government subsidies, the frequency of general meetings and board meetings, and contribution to the local community were derived as major influencing factors. The risk of business closure was 10 times higher for cooperatives whose government support was stopped than for cooperatives that continued to support the government, and the risk of business closure decreased by 42% as the number of general meetings increased by one unit. The number of board meetings showed a tendency to decrease the risk of business closure by 2.2%. Overall, it was confirmed that government policy factors, social value factors, and network factors had a greater influence on the survival of social cooperatives than organizational and financial factor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measures to improve the survival rate of social cooperatives and policy implications were presented.

Key Words: Social Economy Organization, Social Cooperatives, Survival Analysis, Life Table Analysis, Cox Regression